

제41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2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교육부
 - 나. 국가교육위원회
 - 다.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2
 - 가. 교육부
 - 나. 국가교육위원회
 - 다.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인사를 못 나눴던 위원님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

지난 25일 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김민전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말씀하실 수 있나요?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당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때 처음 소개할 때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무처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예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사정을 잘 이해하시는 수석님이시기도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교육부

나. 국가교육위원회

다.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0시06분)

○위원장 김영호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정복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이것 좀 하고 진행을 하면, 괜찮을까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를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양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기관의 업무와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정책 및 행정의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확인·점검해서 다가오는 결산 심의와 법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소속기관 순으로 기관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 아마 모친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친상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해서 업무 보고는 편사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미리 제출한 보고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교육부는 약 한 15분 내에, 국가교육위원회와 나머지 기관은 약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주요 사안과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에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과 6개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였고, 시간관계상 교육부 간부 및 소속기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저출생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난제와 디지털 대전환 등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심화로 유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행복지수와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되고 있어 교실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다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순위 어젠다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개혁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올해는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이루어 내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총 9개의 과제로 재편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세심하게 보살핌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2025년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보통합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효율적 행·재정 지원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많은 양육자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돌봄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서 곧 시작될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도입·운영을 할 예정이며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학년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 사회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각 지역의 늘봄지원센터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대전환기 속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곧 다가올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공교육 혁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으로 수업·평가를 혁신하기 위해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학교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과목과 도입 학년을 확대하고 학교 내 디지털 교육환경 완비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이에 먼저 교권보호 대책들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법률서비스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NEIS와 K-에듀파인 기능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교사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 내 비폭력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해 체육활동과 예술·인성교육 활동이 교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재구조화를 위해 국회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교육격차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학교 실현의 주체인 학부모 지원도 강화합니다. 학부모로서 필요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함께학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엄정 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정수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정주기반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지역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근거지인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 지역의 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등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대학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역대학의 주도적인 혁신 선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대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36쪽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RISE가 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RISE를 통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자원 확보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RISE 생태계 내에서 대학혁신 선도모델이 창출되도록 글로컬3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26년까지 36개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것이며 혁신모델이 대학사회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선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지원하고 유급 최소화를 위해서도 대학과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이 그에 걸맞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입학자원 감소의 위기에도 고등교육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존의 학과별·전공별 대학 체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 등 대학교육을 전환합니다.

또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정주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 기업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대학이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평생학습 대상과 그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온 기조에 따라서 국회와 함께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홉 번째, 데이터 개방·활용과 증거에 기반한 교육·인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증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정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요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행정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개혁의 전략적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9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개혁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손을 위해 꼭 완수해야 하는 주요한 과업입니다.

올해 교육부는 보다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를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이난영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하였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기준 비상임위원 4명의 공석으로 현재 17명입니다.

사무처는 3과 3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4년 예산은 102억 7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4쪽의 주요 성과 요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서른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총 8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중장기 교육정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권고안을 의결하였고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개의 전문위원회와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누적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교육 대토론회를 여섯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45명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20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업무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초·중학교 신체활동 등 주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수요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고자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시범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0회의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해서 미래교육 비전,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내실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과 현장에 다가가는 현장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방향 모색을 위해 지역의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등을 살펴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 및 주요 과제입니다.

10쪽의 정책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혁신과 AI 시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라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일관된 교육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의 역기능적 현상을 완화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단계별로 핵심 의제를 도출해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대학 격차 해소, 대학 경쟁력 강화 그리고 디지털 AI 교육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진 전략과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현실성 있는 현장 소통을 위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의 소통도 실시하겠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은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개정 진행과 계획을 의결한 총 5건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고시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과정 방향을 탐색하고 개발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시범실시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개선 사항과 시사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 소통입니다.

미래교육 방향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 산하 주요 의견 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으로부터 2035 중장기 교육 발전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제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주요 기능인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과 학교 현장 방문,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등 폭넓은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 신설 기관의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성심과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개혁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산하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국민과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를 여는 교육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김민철 편사부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 김민철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민철입니다.

저희 위원회 허동현 위원장께서 모친상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국사편찬위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와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 이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편찬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아울러 한국사 보급에도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인식 함양에도 힘써 왔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외 한국사 자료 수집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1955년 한국사료총서 1권을 출간한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11종 1838책의 각종 자료집을 간행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 업무입니다.

보고자료 6쪽부터 8쪽입니다.

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경주 최 부잣집 자료를 비롯해서 근현대 지역사 자료와 고문서 등을 꾸준히 발굴·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구술자료 수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국의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미국, 일본 등지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는 한국사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수집한 역사자료들을 온라인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사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와 일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3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편찬·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료총서, 해외사료총서, 구술사료선집 등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한문 또는 외국어 자료 중 중요 자료에 대한 국역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외에 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는 한국 학생과 교사는 물론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HGIS라고 하는데 역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하여 한국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14쪽, 15쪽입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영·정조대의 국가운영론을 주제로 제61회 한국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외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전쟁과 민중의 피해를 주제로 한 한중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사 이해 증진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6회 시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연 4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응시생은 연 인원 30여만 명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과 교원임용시험 등의 자격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그밖의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한국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아시아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그 대응, 한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최근의 역사연구 경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되어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연수·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조직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기획연구, 연수, 디지털교육지원, 장애평생교육, 총무과의 5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6쪽, 정원과 예산입니다.

정원은 교육전문직 33명, 일반직 20명, 전문경력관 1명, 공무원 31명으로 총 85명이며, 34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본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요인 분석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육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국내·국제 세미나 등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학술지 등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적용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중·고 교과용 도서, 2026년 적용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학생과 교사를 위한 점자 확대, 음성자료 등의 제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원, 지원인력,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연수 64개 과정, 원격연수 9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연수 운영,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편의 지원, 전문 기관과의 협업 연수 등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특수교육 정보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초 대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공감문화 확산, 인권침해 예방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 교육 자료, 장애공감문화 교육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협력으로 다양한 현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초 연구, 조사업무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문해교육 자료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홍 중앙교육연수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윤홍 안녕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이윤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중앙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소속 직원과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 그리고 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현재 정책연수와 등 3개 부서에 총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연수 개요입니다.

우리 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집합연수는 총 40개 과정, 98개 기수, 원격연수는 48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국정비전 공유와 공직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참여형 연수를 통해 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점 복잡해지고 다각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연수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교육 현장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원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추어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력, 리더십, 협업 역량 등 교육 현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개발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인 조직 및 직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 선배들과의 멘토링, 정책 현장 체험 등 신규자 과정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 교원과 직원들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수업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연수 지원 시스템인 배움누리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AI 기반 학습 분석 및 연수 추천 기능 확대와 다양한 학습 수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디지털 기반 연수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원은 17개 시·도 교육연수원들과 최신 HRD 동향을 공유하고 연수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범주를 국외로까지 확장하여 타 국가 교육연수 기관들과 상호 교류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연수원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권성연 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1년 설치되었으며 교원의 징계 처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개요와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소청심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약 651건이며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290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인의 학교급별로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소청 건 중 대학이 48.8%, 유·초·중·고교가 51.2%입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징계처분이 62.8%로 가장 많으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14%, 직위해제, 전보 등 그밖의 불리한 처분이 23.2%입니다.

청구인이 받은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을 위원회에서 취소하거나 변경 결정한 인용률은 23년 기준 23.8%입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처우 등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에 대한 중앙고충심사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교원 출신을 포함하여 행정 및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여러 청구 유형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의 권익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도 위원이 속하였거나 속해 있는 법인, 기관 등이 관여된 경우 위원은 해당 사건 심사에서 선제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출석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및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 권리구제 효과 증대입니다.

처분권자에게 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조치 미이행 시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강화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교원소청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서류의 접수 및 송달이 가능하고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의 조회도 가능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제22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총 3개 부서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691억 원이며 부설기관으로 제주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역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 대학과 함께 외국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터디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학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 보고드립니다.

동 사업은 해외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친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위과정에 130개국, 총 2331명을 신규 선발하였으며 특히 국내 산업과 학계 수요를 반영하여 이공계 분야 및 지역대학 선발 인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7쪽,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확산 및 발전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시험 성적은 한국 유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필시험인 PBT 평가 또 인터넷 기반인 IBT 평가, 말하기 평가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2회의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외 총 49만 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보고드립니다.

먼저 국비유학 사업은 국내 우수 인재가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전략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8명의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 300명을 선발·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교원 해외 파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원을 ODA 수원국에 파견하여서 현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학, 과학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60명 교원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국제 교육교류 추진 사업 보고드립니다.

한일, 한중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 교류부터 학위과정 지원까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래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원은 제주도에 글로벌역량지원센터를 두고 영어교사 연수, 초·중등 학생 연수 또 시·도교육청 국제업무 담당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와 중국어 보조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25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대국민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초·중등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 국제업무 네트워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국제 교육협력 대표기관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학술원 박주용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박주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학술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술원 일반현황은 1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로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학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연구를 지원하여 후속세대와의 학문적 소통을 증진하고 국내 학문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결과는 학술원 논문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참여 사업입니다.

국제 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탐구하고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일학술포럼 개최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공동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를 교류하고 국제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학사원이 번갈아 한일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술원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회원 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 회원 경륜 사회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기타 사항과 15쪽 회원 명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순서에 앞서 야당의 진선미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님들께 아직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선미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의 최다선 의원님이십니다.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또 법안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인사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박수 치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데, 자료 요청 건 말씀하시지요.

고민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고민정 위원**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제가 좀 일찌감치 요청을 못 드리기는 했는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핵심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핵심 교육 의제가 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한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7월 10일경에 개발 중인 서비스에 대한 기능 테스트 수행이 완료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아마 지금 작성 중이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못했나 싶기는 한데요. 이것은 좀 직접 저희 방으로 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일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에 얼마큼 예산 신청을 했고 실제로 얼마큼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우리 부 차원에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답이 왔습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관련한 제가 말씀드린 이 요구 자료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고민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우리 문정복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조정훈 간사님과 소위 구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위는 관례대로 법안소위에는 7명 그다음에 예결소위에는 8명 그리고 청원소위에 4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훈 간사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법안소위 위원들을 좀 증원하자는 얘기를 들어서 다방면으로 논의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저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보면 21대 교육위가 한 600여 건의 법안을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각계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 조율도 좀 어려웠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간사님과 제가 더 논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추후로 논의는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소위 구성의 시한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논의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 간사를 해 봐서 좀 압니다마는 우리 조정훈 간사님께서 저에게도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법안소위에서 활동하시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요청을 하셨고, 또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국회 관례상 말 그대로 법안소위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소위로 운영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있는 데다가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법을 다루기는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또 공론화해서 법을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정훈 간사님과 우리 문정복 간사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합당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관련해서 이왕에 문정복 간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위 구성을 빨리 해서 교육과 관련된 법안이 완성도 있게 처리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노력하자,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구성에 관해서 저희가 법안소위와 예산결산소위가 있는데 관행은 4 대 3,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법안소위에 대한…… 이게 자꾸 울리네요. 하울링을 좀 낮춰 주시고요.

법안소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알려 주셨고 저희 국민의힘 또한 법안소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실과 알아본 결과 소위라고 부르는 것은 12인 이하로 구성된다, 12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7명인데 양당이 1명씩 증가해서 9명이 돼도 소위 구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민주당 간사님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법안소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을 내는 과정을 거친 법안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은 자명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저희 교육위에서 통과되면 그리고 여야가 문제없이 통과시킨 법사위, 본회의 또 대통령의 법안 공포 그리고 적극적인 법 집행까지 훨씬 더 그 이후 과정이 좋을 것이다, 이건 다 예측할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규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행을 바꾸자는 그 한 가지인데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7인 소위가 9인 소위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다 싶으면 저는 1년만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도 드렸고요.

저는 이게 뭐 정리, 그러니까 당리당략이 아니라 저희 교육위의 풍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법안소위에 담고 위원장님과 민주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소위를 더 자주 열자, 지금 모든 걸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간사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구성에 한 명씩 더 추가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면 나머지 본회의에서의 법안 논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갖고 저희가 오늘 협상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니까 저희 입장도 문정복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50건의 법안이 회부되어 있어요. 이미 50건이 들어와 있고요. 약 5만 4000분 국민의 동의로 청원도 지금 회부 중입니다. 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안소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아서 법률안과 청원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오후까지 상임위가 열리니까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당 간사님들이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회 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서 처리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잠깐 3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성준 위원 지금 이제 소위 구성을 늘려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소위의 본질은 소위를 통해서 아주 축약하고 심사하고 심도 있는 것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위가 15명인데 소위를 9명으로 늘리자 하면 대위가 되는 거예요, 대위. 큰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15명이 좀 더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소위를 9명으로 늘리면 거의 같은 위원회 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간사님들이 더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박성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요. 다만 소위의 정의는 국회 규정상 12인까지다. 그래서 7인이 9인이 된다고 소위가 대위가 되는 건 아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 12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없고.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국토위원장님도 하셨지만 거기에는 이제 위원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1소위, 2소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7명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전체회의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두 간사님께 제가 제안을 했고 또 합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주질의는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 보충질의 역시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는 22대 국회, 아마 21대 국회에서도 도입한 적이 없는데 대정부 질문과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

고 충분히 질의하고 또 기관장이나 관계자들도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함인데, 아마 여야 위원님들 또 오늘 초선 위원님들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TV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면서 가장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질타했던 내용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일방적이거든요, TV에서 노출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7분, 5분 시간이 기관이나 정부 측의 답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이 길어지면 7분을 잘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말을 끊게 되고 막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어떤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 두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님께서 또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부터는 7분, 3분인데 정부 측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하실 말씀은 하시되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고의로 시간을 너무 늘리든지 그러시면 또 적절하게 저희가 개입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제안에 관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간사님? 관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 저희가 상임위를 해 보면 정부 관계자 발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중간에 서로 논쟁 아닌 논쟁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 관리하는 행정실도 굉장히 난감해지실 거고 그래서 질의하시고 정부 관계자 답변하실 때는 충분히 끊지 말고……

○**위원장 김영호**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말씀은 제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시지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강경숙 위원** 예, 켜졌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해로 인명 피해가 있고 또 재산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그런 미증유의 물 폭탄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는 담벼락도 무너지고 보건실도 거의 못 쓰게 되고 그랬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에 소방관들과 관계 당국에 여러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방지가 되고 또 학교의 이런 피해가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장관님께 그런 세밀한 긴급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장관님,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항상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비상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대식 위원님이신데 준비되셨지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갑자기 순서가, 김민전 위원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제가 지난 1차 우리 회의를 하고 지역에 내려갔더니만 ‘그래도 다 대치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교육위는 참 잘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참 교육위 이것만큼은 아주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만큼은 이념을 떠나서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벼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 제가 남인순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신문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민정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교육위원회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볍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교육에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육과 함께 풀어나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여기 화면 보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보입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분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풍부한 청년 인구가 있었다, 그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요.

교육부는 95년도 3차 산업시대의 개막에 맞춰서 대학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20%에서 2.5배가 증가했고 국가 GDP도 7000억 달러에서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30년 전 획기적인 교육정책 전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지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인구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 수준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과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시 교육입니다. 오늘의 성장을 만들었던 과거의 낡은 옷을 벗고 내일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위기는 눈앞에 다가왔고 더는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전체 교육위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고등교육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게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엄연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고등교육의 개혁의 방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법과 제도 둘째,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초등교육 과정의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은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진국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1인당 교육비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 과정의 1인당 교육비가 유독 낮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비정상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입니다. 현장은 언제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지역과 대학 중심의 상향식 정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과정,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장관님 말씀 듣기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미래에 책임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부 관련된 정책 부처, 여야 국회의원님과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개혁 특별소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짚막하게 장관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등교육이 한번 전면적으로 재도약을 해야 되고 고등교육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말씀하신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에게는 아직 4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7분을 다 쓴 거예요,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김대식 위원 아직 초보자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밤새도록 준비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교육청들이 너무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 태블릿 PC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샀어요. 이 중 238대는 평교사에 지급하고 210대는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

그다음에 전남교육청, 2018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2년까지 연평균 교직원 300명에게 무주택 교직원 주택 임차 명목으로 1인당 3000만원 해서 총 346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습니다. 이것 나중에 국정감사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부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교육청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제 시간도 다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더 주시면 안 되겠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대식 위원 다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 질의 때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교육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그 효율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22대 첫 번째 현안질의에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원래 질문과 좀 관계없이, 조금 전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전부 다 함께 소통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역사 전공 교수로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차후 집중적으로 하고 또 8월 30일 날 나오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내에서 역사 전공 교수 출신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혹시 친일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의도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일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줄여서 AIDT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AIDT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쳐

야 될 교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학부모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AIDT가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DT는 학생 맞춤 학습을 돕는 수업 지원 도구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별로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중고 전 학년에 다 도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도입이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2025년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세 교과부터 도입되고요 단계적으로 학년과 과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디지털교과서, D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AI가 붙었던 말이지요. 그러면 디지털교과서하고 AI 디지털교과서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PDF 파일을 교과서를 찍어서 디지털화해서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인 기능도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이 그렇습니다만, AI 디지털교과서는 여기에 AI 기능이 추가됐다, 잘 아시겠지만 AI 기능은 요즘 팔목할 만한 기능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기능이 특히 맞춤 학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그런 교과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IDT와 기존에 사용했던 서책형 교과서, 그러면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자면 장기적으로 보자면 AIDT 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 왜 AIDT 교과서가 좋은지 이 차이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서책형과 AIDT는 당분간 병행 사용할 예정입니다. 워낙 새로운 형태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응하는 기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너무 과감하게 그냥 대체한다거나 하면 불안할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한다는 원칙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T가 AI 기술이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기술이 계속 지금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AIDT가 내년하고 내후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전하고 있고 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기능이 계속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반대 여론이 많아요.

인터넷 나오는 반대 여론 나오는 것 죽 한번 검색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큰 변화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걸 도입하는 취지나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요,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오해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불식을 시켜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우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계속 좀 다듬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약간 근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AIDT 이 교과서가 미래형 교과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동적인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책을 넘기고 보다 보면 좀 능동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자, 오늘 35쪽 봅시다’ 그러면 클릭하면 태블릿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35쪽, 45쪽, 본인이 관계없이 찾아 들어가는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점 같은 것은 준비해 두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 방식을 바꾸셔서 이제 답변할 때 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준혁 위원** 예, 괜찮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AIDT의 가장 큰 장점이 학생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지식의 흡수나 학습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전달 차원에서는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말씀하신 아이들이 능동적인 학습자 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AIDT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수업의 변화입니다. 수업의 변화는 또 교사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AIDT는 교사의 수업 변화를 지원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혁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도? 그래서 교실혁명을 하는 것이지 AIDT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김준혁 위원** 교실혁명 아주 좋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AIDT 이것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도 한 오륙 년 전부터 많이 해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실행도 직접 추진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께서 그것 전문가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새로 만드는 이 AIDT를 직접 보시고 실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실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또 비디오도 봤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을 직접 보신 건 아니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수박람회 때 AIDT 실제 활용을 교사분이 수업시간에 하는 것을 데모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여 주기 위한 거지 실제로 그것이 학생들에게 적용이

돼서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된 것은 정확히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걸 확인을 계속 하는 과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다가 일부 진행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학교를 확대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22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8 입시도 실제로 거의 입시에 적용되는 고1 학생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또 입시 개편이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실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백년대계,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IDT 이 교육이 교실혁명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막 끼워 넣는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혁 위원 왜 그러냐,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몇 개 학교에서 지금 몇 개월간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천억 아납니까? 거기다 1년에 몇천억씩 들어가고 다년간 하게 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조 단위가 넘어갈 이 엄청난 교육이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6개월 혹은 몇 달 그것도 몇 학교를 갖다 시범으로 해서 나온 성과만 갖고 내년에 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교실혁명이라는 프레임워크가 교사가 중심에 있고 교사 연수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걸 잘 적용하는 만큼 교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작용도, 사실은 교사들이 실행을 하면서 하는 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초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걸러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준혁 위원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것을 몇 달 만에 하고 이것을 성과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지요.

AIDT, 책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초등교육법 나오지요. 그렇지요?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에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 그러니까 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인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라고 볼 법률상 근거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고요.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도 교과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다시 자료 올려 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법률상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2003년 10월 달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법적 근거 여기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 부재로 법적 지위 모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교육부가 그래서 10월에 시행령을 바꾼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왜 시행령을 바꾼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법률상으로도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니까 시행령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체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간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시행령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 사실 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입법조사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3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안 됩니다.

○**김준혁 위원** 그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법률 근거를 만들지 않고 시행령으로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여야를 떠나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장관님이나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를 할 텐데 그러나 준비되는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못다 한 질문은 이따 3분 추가질문 때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이나 특히 교육, 평가 이러한 것들은 수혜를 받으실 때 세계적인 기준이나 통계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인구당 의사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평 지역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해서 여기 교육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에 있어서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의평원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하는 것을 존중하고요 또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 정원 증가에 따라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에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할 때는 주요 변화의 지표에 따라서 새롭게 또 의평원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 인제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한 7.5% 소폭 증가해서 제외되었지만 나머지 30여 개의 주요 의과대학들은 의평원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최근에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평원으로 하여금 압박을 받거나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대로 의평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또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의대 교육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무조건

그냥 이게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보다는 바뀔에도 불구하고 질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교육부와 함께 의대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단체가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이라든지 자칫 이러한 분들이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어떤 정부의 의정갈등이라든지 의대 정원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평원의 지배구조를 좀 더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사실은 또 질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질 제고를 위한 보다 개방된 체제를 제안드린 것이지 결코 그것이 질을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교수 임용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환자가 됐을 때 어떠한 의학, 어떤 처방을 받을 때 의대 교수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신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자칫 지금 정부의 검토되는 안들을 보면 어떤 이론에 대한 공부, 학위에 대한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실제 경험만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원의들의 실적에 대해서 100%로 인정을 하고 또 개업의들에 대해서 문호를 더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고를 한 것인데요. 사실 그런 정책들이 질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 교육에 더 들어오셔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질 제고나 질의 담보는 전제를 하고 제안하는 것이지 교육부도 그거를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의대생들 양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교육부의 조치가 결코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교육부의 어떤 입장이나 검토되는 안들이 자칫 국민들께, 혹은 의대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문제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총리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완만히 이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셨듯이 교육부가 의료계

와 또 의학 교육계 또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과 충분히 좀 더 소통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다듬고 의료개혁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다음은 교육공무원 인권 보호 관련해 가지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7월 18일이 되면 서이초등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순직한 지 1년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상황이었고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교육계 현실을 되돌아보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다라고 부총리님께서서는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무엇보다도 지난 국회에서 우리 김영호 간사님,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십니다만 그때 간사로서도 많이 역할을 해 주시고 해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습니다. 교육부로서는 큰 법제적인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도 부족하고 또 홍보도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현장에 좀 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개선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고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입법활동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교사의 교권뿐만이 아니라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일하고 계신 교육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악성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 중에는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한 사례도 존재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난 유감스러운 사태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신상 공격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이 굉장히 다양했고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폭언은 물론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협박하거나 1년간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신체마비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교육청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하였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상응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이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교육부에서도 악성민원에 대응해서 단위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청에서는 통합민원팀을 구축해서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현재 악성민원 대응 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부총리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좀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용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AI 디지털 기술 적용이 혹시 검토되고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청원에 대한 참여도 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이유들을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도 언급하셨는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 살펴보셨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스마트기기 부작용 우려라든가 또 현장의 준비 부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듣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사실 교육위원인 저조차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조금 생소한데 아까 부총리님께서 홍보를 언급하시기도 했고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를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함께학교라고 해서 온라인 정책 홍보 플랫폼, 정책 수렴 플랫폼을 최근에 해서 상당히 지금 한 7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또 학부모님들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설명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제가 매주 한 번씩 교사들과 하는 함께차담회라고 소통 차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학부모님들하고도 좀 더 많이 늘려 가려고 합니다. 그런 소통 노력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하려고 하고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신 AI 디지털교과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빠르게 불식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모두 다 중요한 과제들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만큼 관심을 잘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인데요.

참고로 박성준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2년 9월 27일 날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셨지요? 2022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2022년 11월 7일 날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 지명을 받고 11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명은 9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9월 달에 받으셨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은 22년 9월 27일 날 임명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쪽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22년 9월에 두 분이 다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중장기 교육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준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교육계……

○박성준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학계에서도 계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럼요.

○박성준 위원 지금 임명하신 지 1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박성준 위원 1년 반 되고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보통 6개월에 실질적인 계획의 산출물을 내지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고 하면 실질적 계획을 내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온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의, 예를 들면 앞에 김대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고등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들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러니까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지.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쪽 보면 상당히 부분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교육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보통 정권이 들어서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교육정책은 이렇게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통 6개월 안에 발표를 하지요. 아마 이배용 교육위원장님께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토론회만 했어요, 토론회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게 그거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계속 수립합니까, 그러면?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에요,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정하여 놓고 거기에 따라 수립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 한 4년 지나고 5년 때 발표할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요. 지금 현안의

과정을 여러 이슈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합의해서 내년 3월에 그걸 발표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과정이고 작년에도 국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역대 정권에서 4년 차에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걸 처음 들어 봅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권이 만들어지면 보통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교육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교육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게 하나도 없고 부분적인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다. 디테일로만 가득 차 있지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무만 몇 개만 보이지. 이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교육정책에 난향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준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는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받고 2023년 1월 타 부처에 비해서 제일 먼저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입이라든가 국가교육과정이라든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대 정원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모르게 발표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면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앞서도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께 그런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의 근면성이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고 정부 능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됐던 것은 정부의 능력이고 교육 인재 양성이었는데…… 지금 장관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년 뒤에 교육감 선거 나가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안 나갑니다.

○박성준 위원 안 나가는 거 확실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이런 거지요. 정부 부처의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건데 장관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그리고 AI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AI 교과서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5대 기간산업에서 성장을 해 왔고 거기에 인재 양성이 되어 있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인재 이런 인재 양성들 쪽 해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도의 기술 중의 하나가 뭐냐면 AI 기술인데 이 윤석열 정권의 AI 기술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재 양성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AI 허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학생들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교과서 하나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AI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고 장기 5년 계획, 10년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면서 AI에 대한 교과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AI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 발전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발전계획이라기보다는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실수가 아니겠느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 아니겠느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AI가 교육에 적용이 될 때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해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AI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하는 그 계획이 당연히 있고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그걸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서의 AI 관련 첨단 분야 전공도 더 확대하고 있고 또 AI 관련 여러 가지 대학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도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첨단 분야 중에서 AI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과목의 시간 수도 훨씬 더 확대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고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계속 AI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특히 교사들이 맞춤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교과서나 코스웨어를 잘 제공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박성준 위원 제가 핵심은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큰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사진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해 보니까 AI 교과서에 AI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박성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단순기능 이외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AI 교과서 개발은 어디가 주체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기존의 종이책을 출판하던 출판사들만으로는 AI 기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데이터든가 이렇게 해서 종이출판사들과

AI 기술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장관님 얘기 나오는 게 이 AI 교과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관님이 2년 뒤에 교육감선거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특히 장관님이 2022년에 교육감선거 나갔을 때 에듀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됐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AI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이주호 장관이 자기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장관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 4대강 사업을 시범사업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이게 빠른 것 아니냐. 그리고 시연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AI 기능 자체가 미비돼 있다는 거예요, 단순 디지털 기능만 있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장관님 오해사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째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장관직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정말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축적한 그런 경험을 충분히 국가에 봉사하라 하는 그런 소명으로 알고, 제가 쪽 교육계 정책을 관여하고 또 연구하고 국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교육의 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여러 사회적 난제를 교육의 힘으로 한번 해결하는 데 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교육감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없고요. 제가 장관직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장관을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제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준 위원 추후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장관님이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특히 에듀테크 관련된 관련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없애 줬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 두 번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정부의 능력이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AI 기술 얘기를 많이 하고 교과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해서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질의시간 변경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은 느끼시지요?

(웃음소리)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서 추진합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서지영 위원님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던 유보통합 문제도 이제는 그 시작을 앞두고 있고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도전들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말씀하시고 염려도 말씀하셨는데 교실혁명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도전과 시도를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오랫동안 보급이 되어왔고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가 학년마다 디지털교과서를 받아 오는 것을 잘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오히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보급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교실에서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시도들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준비라든지 교실 내에서의 안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가 공적 부문의 교육에서 이 부분은 더 굉장히 속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나 학원에서나 학습지를 통해서도 AI 솔루션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시장에 널리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IT 인프라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준비나 속도가 느렸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가 붓과 먹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또 우리가 종이를 이용하던 시대, 종지와 연필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타자기를 사용하고 이제는 IT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실 현장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실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에 교육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도 저희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지영 위원 지금 현재의 교육이나 교사들의 훈련 상황, 홍보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AI 디지털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고요. 교사들의 수업이 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교사분들이 정말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준비가 우리 교육부로서는 정말 큰 과제이고 또 작년 연말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교원들 연수를 대대적으로 특별교부금의 0.8%나 이렇게 큰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정말 더 앞장서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됐고요. 지원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연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선도교사 연수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1만 2000명이나 이렇게, 본인들이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손을 드신 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만 2000명이나 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교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입식으로는 이걸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 형태라든가 또 교사 연수를 하는 주체도 기존 교육청의 연수기관이 아니고 대학이나 민간의 가장 전문가들이

지금 연수 교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학교 단위로, 사실은 학교로 가 보면 교사분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준비가 된 또 흥미가 있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AI나 이런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학교 단위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또 열의가 있는 교사분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분들한테 오히려 동료로서 옆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 컨설팅도 지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교사분마다 다 조금씩 다르십니다. 자기가 좀 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한번 수업을 바꿔 보고 싶다 하는, 수업에 본인들이 강조하는 분야가 또 다릅니다. 그걸 다 모듈화해서, 저희가 한 20개가 넘는 모듈 형식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라든가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 교사분들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교사들끼리 하는 연구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도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지원 예산으로 정말 다각도로 지금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들, 지적들을 더 잘 경청을 해서 더 보완하고 해서 교사분들이 철저히 준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 상대로 공청회도 좀 하시고 설명회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교실에 도입이 되기 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1주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부산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장학사님께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에 이어서 또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굉장히 무분별하게 항의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특히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학생의 교감선생님에 대한 폭행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북 완주의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들에 대해서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 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이초 사태가 저희로서는 큰 반성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교권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5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잘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학기에 상당히 주력을 했고요.

또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체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체감이 약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따져서 보완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번 국회에서 정성국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께서 보완하는 입법도 지금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좀 더 협의해서, 교권보호 입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소위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정책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 밑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별도로 뒀서 지금 학생 마음 건강이나 또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데 그게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과목을 강화한다든가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기존에 강조됐던 것들과 더불어 사회정서적인 역량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요.

또 함께학교라고 해서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 3주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최근에 있었던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에 대한 폭행사건을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왜 선생님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분통이 터졌다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그 장면을 보고 학부모님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일각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현장의 교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이어지게 했더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청 단위에서 시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도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 방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사 또 학부모·학생 3주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무를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는 그야말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너무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방의회의 결정 사항들을 존중하면서, 다만 교육부로서는, 중앙부서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3주체 간에 보다 조화로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시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맡겨 놓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

가야 될지, 인권만 주장하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러한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맡겨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까 AI 디지털교과서 얘기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관님, 다음 교육감선거에 나가시냐, 안 나가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의혹이나 추정을 가지고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직 업무가 마치 선거와 연관된 것처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행여나 뭔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본다면 정책 집행을 자신감 있게 하기도 어렵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육위에서는 이 점을 좀 더 유념해서 저희가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리고 존중하는 그러한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교육감선거 불출마 확인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사진입니다.

당시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 전현직 교사, 예비 교사 30만 명이 모였고 저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고 저희들도 절절히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장관님께 서이초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로서도 교육부가 크게 반성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번 서이초 1주기 추모행사에 장관님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교권 회복 노력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한 약속들 다 지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교사 1만 1359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장관님께서 교권 회복 성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러합니다. 교권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 23년 5050건으로 매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대로 하고 계신 것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 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화면 보시면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교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정식 명칭은 교육 전담 여건 조성 사업 예산인데요. 2024년 총 139억으로 2023년 189억 1500만 원에서 50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있는 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교육활동 보호·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은 평균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교원 교육 전담 여건 지원,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여건 조성, 교원 인사제도 개선, 다섯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지요.

장관님,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어떤 업무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활동보호센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실시를 했다가 그다음 연도부터는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지역에서……

○백승아 위원 아니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변호사, 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소송 전 분쟁 조정 기능,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수집·분석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상주 변호사나 상담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학생 분리제도 운영 현황,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자료가 없어요. 이는 당연히도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8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하나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관심 사업인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예산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이 0.8%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3818억 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혁명의 주체는 교사다. AI는 수단일 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순이에요. 교권 보호 예산은 139억,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 예산은 3818억 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권 보호 예산이……

○백승아 위원 아니요, 이것은 말씀드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교부금에서 더 확대됐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승아 위원 화면 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전북의 사건인데요,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설을 막 했어요. 수업 방해했는데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어떤 생각 드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보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백승아 위원 이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공론화가 안 될 뿐이지요.

선생님이 지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세요. 학생 또한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동의 없이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또 제가 전북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다른 다수 피해 학생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수업권을 좀 지켜 달라고. 선생님 교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수업권도 좀 지켜 달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생 분리제도입니다. 작년에 생활지도 고시로 발표가 됐었고요. 고시에는 있지만 분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분리된 학생을 보살필 공간, 인력,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법제화가 안 됐는지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작년에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로 충분하다면서 부득불 반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안소위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적은 예산 또는 교육청 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성과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데 예산과 인력이 다소 수반되지만 중요한 과제였던 학생 분리제도는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 보시면 학생 분리제도, 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제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분리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법제화가 필요한지 않은지만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제가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백승아 위원 아니아니요, 저도 지금 발언을 해야 돼서요.

법제화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제가 위원님 시간을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런 걸 방지하자는 취지 아십니까, 이게?

○위원장 김영호 조금만 들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설명을 좀……

분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분리라는 게 어떤 학교는 교장실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무실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간 활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와도 협의를 한 내용은 분리라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가장 좋은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현장에 맡겨 두고 현장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가겠다 해서 그런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결과를 보고 확산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을……

○백승아 위원 장관님, 현장조사를 해 보면 제 기억에는 83% 정도가 학생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요. 법제화가 되어야만 이게 보장됩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다시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교육 데이터 개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5월에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이미 우려점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하는지를 먼저 보시지요.

여기 개별 학생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와 수능점수, NEIS 관련 데이터인데요. 지금까지는 수능점수 결과 연구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70%만 줬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3년만 지나면 100% 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능점수,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까지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전체 학생 수, 과목별 표준점수, 과목별 등급 비율까지 다 공개가 돼요.

장관님, 학생 이름, 학교 이름 이런 것 가리면 어느 학교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식별 처리한 후에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되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도 사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친 후에 적절한 연구인지를 보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할 때도 온라인 방식의 데이터안심구역이라고 RA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만 가져가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서열화가 그냥 노출이 된다는 그런 것은 이중 삼중으

로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왜 이런 서열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에게 연구까지 못 하게 하면 기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처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백승아 위원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에 100% 정보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사교육 과열되고 고등학교 서열화 심해질 것 당연한 처사인데, 지금 데이터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셨는데요. 교육부의 데이터 관리 역량 부실해요. 디지털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불과 5월에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명단 다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명단에 소속만 있고 이름은 다 가려져 있어요. 1차·2차 회의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 보시면, 장관님 아니라고 하시지만 장관님께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에듀테크 기업이 있거든요.

좀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빨리 정리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이어서 나중에 3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은 나오는 주제가 서이초 또는 디지털교과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 1년 가까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대통령 추천도 아니고 한국교총이 최대 교원단체기 때문에 교원단체 대표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교위 활동을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 국회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국교위 활동을 직접 했던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교위를 1년 해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조직이라든지 어떤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위원으로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교육 장기 플랜을 만들어라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생했는데 여기 직원 수라든지 연 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교위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초기에 의욕 있게 법안이 구성돼서 실제로 출범을 하면서 생각보다 아주 대폭적으로 조직이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교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국회, 언론, 국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다 여야 위원님들이 열악하다는 것 지적하셨고요. 언론, 학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 또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 그리고 조직 확대 그리고 예산 확대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는 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독립적인 연구센터가 필요한데 지금도 타 부처 기관에다 의뢰하는 그렇게 열악한 실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욕 있게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국 위원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수가 167명인데 국교위가 여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0명…… 33명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33명.

○정성국 위원 제가 국교위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 전문위원회만 해도 2개, 특별위원회가 5개씩 운영되고 그다음 중장기 교육계획 세워야 되고 또 국민참여인단 500명 이런 운영 같은 걸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사실상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게 주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한 계기도 문제인 정부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게 돼서 탄생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교위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후에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일할 사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보통합 늘봄학교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성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화제에서 좀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고교학점제거든요. 이 고교학점제가 오늘도 거의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2023년 5월 25일에 한국교총 회장 시절에 서울에 있는 불암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교학점제를 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제가 결과를 보고한 걸 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지금 교육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도 잘 안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교학점제가 국교위에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2022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변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현장에 시작되기 때문에 차질 없는 현장 접목을 위해서 우리 책임교육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점검하고 저 장관으로서도 점검 회의를 여러 차례 계속하면서 지금 현장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혹시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최근에 고교학점제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신다든지 이런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책임교육실장하고 국장께서 아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국장님께서 담당……

○정성국 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하신 사례 있으신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시지요.

○정성국 위원 김연석 실장님,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고교학점제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어려운 점들, 교사 수급 문제 그다음에 선택과목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이동 문제,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 점검하신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위, 성명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입니다.

저희도 개별 학교의 직원들하고 또 시도의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부총리님께서 실제 함께차담회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뭐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의견도, 바로 지난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8년 이후에 한 5년 가까이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죽 해 왔고 지금 막바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 정리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과제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부족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은 시도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온라인 학교가 잘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 왔지, 실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 지도라든지 또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부총리님, 저는 교육부장관도 아닌데 한국교총 회장인데도 제가 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다 만나고, 여기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가 늘봄학교, 유보통합 또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성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저는 현장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총 회장되기 전에 체육 전담을 했습니다. 체육 전담 선생님을 했어요. 제가 체육 전담 선생님을 하니까 그냥 인기가 많았어요. 왜? 체육 전담을 한다는 이유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체육시간만 되면 애들이 뛰어오거든요. ‘선생님’ 하면서 뛰어와 가지고 애들 자제시킨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 학교에서 이 체육활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1학년, 2학년 아이들 교과를 통합 교과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고 하신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체육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워낙 중요하고, 최근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이들의 마음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됐고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큰 악영향이 있겠다 해서 체육은, 물론 예술이나 다른 분야하고 사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체육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공감이었습시다. 그래서 또 국교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서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장 교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분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생각해서 좀 살펴보니깐 반대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이 꼽힌 게 뭐냐면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합의 없는 졸속 추진이 85.6%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학년이 통합 교과로서의 운영도 굉장히 의미가 크지만 체육이라는 과목 자체는 분리해서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을 보장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합의 또는 설명 또는 공감 이런 부분이 부족한 데 대한 반대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체육 교과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이것, 어차피 지금 결정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교원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의 없는 졸속 추진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다 돼 가서…… 특수교육원 원장님! 갑자기 부르니까 놀라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장관님하고 하나 여쭙볼 게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금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연차적 개발 이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하면 일반 학생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적응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게 정말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때 충격이 없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시간 지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하십시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선미 저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초등학교 3·4학년 국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하고 있고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반에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다 수준이 달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부터 심하지 않은 학생 다 달라서 그 교수학습 설계를 특수교사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DT를 활용을 해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수학습 설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마다 구어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한, 상징체계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또 단어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면 정확한 발음의 단어를 확장하고 이런 반복 학습의 개념에서 장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발달장애 학생들이다 보니 칭찬이나 격려, 보상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지원 측면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학습 관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10초.

○정성국 위원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면서 교육부나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이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선미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무래도 백승아 위원님이랑 정성국 위원님은 현장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현장 교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이 특별히 이 두 분 위원님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에는 여야, 정부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입 4년 예고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4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단서조항 남용으로 혼란에 빠진 25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의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은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지원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에 돌입하는 시기인데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충분한 논의나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입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올해 단기간에 도입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도교사들도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발표된 전형계획을 보고 고2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5월 말 확정된 수시모집 요강을 보고 지금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까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학하려는 학과가 갑자기 폐지되고 통폐합 대상에 거론되거나 없던 전형이 신설되고 알고 있던 전형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입시제도를 뒤엎은 건 교육부 교육당국이지만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분들이 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시 보는 수험생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교육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2025년 입시 변화에 대한 충분한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 확대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 사례를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무전공 선발 확대를 시작으로 2월 간호대 증원—올해입니다—4월 의대 증원, 교대 감축도 올해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입시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발표를 하였고요.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진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해 6.6%에서 올해 28.6%로 기존의 4배가 늘어나며 지금 입시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무전공 모집 단위 인원 확보를 위해 세분화했던 단과대학을 통폐합하거나 기존 모집 단위에서 전형별로 인원을 축소했고 평가에는 여러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위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학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입 4년 예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그러면 예고제의 도입 목적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입시의 안정을 위해서 또 학부모, 학생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년 예고제가 도입이 됐고요.

다만 정원의 변화라든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서 입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2014년도부터 대입 4년 예고제를 도입해 온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행하는 입시 제도인데 올해 초에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의 혼란이 있다는 부분들을

학교 당국이라든가 교육 당국에서는 좀 알지 못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간호대나 의대 정원처럼 정원이 변화하고 또 무전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식 용어로는 전공자율선택제인데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선택 권한이 좀 확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혼란의 우려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정보 제공이나 또 상담 확대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지금 PT 한번 봐 주시지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현재 고3 학생들의 경우에 중3 학생일 때 3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다음에 대입전형의 기본 사항은 고1 8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적용된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작년 4월에 공표되었어야 하고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계획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법령의 단서조항과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상 구조조정에 따른 예외사항을 명목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 의대 증원 정책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입시의 안정성을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교육부로서도 정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구조개혁이나 교육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변화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또 절실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변화를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또 정보 제공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예고제가 무색하게 당장 25년 대입 때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혼란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입시 전형이 바뀐 경우가 올해만 3387건입니다. 예년보다 지금 40%가 증가했고요. 학과 단위 변경 사항은 이보다 더 많고 312개 학과가 지금 폐과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특히 무전공 확대 정책은 수천 명씩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그다음에 향후 선택 과정에서 선발되는 혼란 때문에 지금 입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뻔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 준비 없이 교육부에서 시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하신 전공자율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 대학들이 이미 하고 있던 혁신 사례를,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하고 있던 사례들을 조금 다른 대학에도 확산시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특정 전공으로 미리 선택하지 않고 일단 그냥 큰 학부나 이런 넓은 광역 모집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나중에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택 폭을 크게 확대해 드린다는 장점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정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 지난번 1월 무전공 확대는 분명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대학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처음에 저희가 규모도 조금 축소 조정을 했고요. 또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해서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철회하고 그냥 유인 체계로 구축을 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확산하는 조금 점진적인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 규모가 지금 전공자율선택제로 올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혼란이나 학부모의 그런 우려는 최소화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계속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무전공 전형 확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전공자율선택제가 사실 그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이드한다거나 아니면 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학문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별도의 연구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초 과목으로 해서 또 융합과목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철학이나 이런 인문 과목들을 더 많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보완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결과가 나와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9월 이전에 완료 예정으로……

○정을호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나왔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진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지금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쏠림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부작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는 방안에 사실은 그냥 전공자율선택 도입뿐만 아니고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함께 제출을 하는 대학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을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작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둘러 하시는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못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교실혁명도 그렇고 또 유보통합이나 늘봄도 그렇고 지금 관심이 있으신 전공자율선택제도 그렇고 우리 교육이 지금 크게 바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또 늦추는 대로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속도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속도를 적정하게 저희들이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이번에…… 주체는 학생입니까, 교육 당국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업무보고……

○정을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무전공제 확대 관련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자기들이 실험 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 당국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대학에서 혁신 사례들이 나오고 그걸 확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의 선호도 상당히 많이 있는 정책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것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늦추면 거기 혜택받는 아이들이 또 한 해가 늦춰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도 있지만 또 늦추는 데 따른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과 대학 구조조정, 대학혁신을 위해서 지금 무전공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PT 한번 보시지요.

저 발언 어디서 보신 것 같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누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지난해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아까 입시 4년 예고제를 본인께서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정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 보면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는 계속 중요하지만 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구조조정이나 대변혁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그 균형의 중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이어야 되고 수요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육 당국이 된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꼭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앞두고 그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국회에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이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청원의 취지를 한번 읽어 보면요,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에게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 기기를 수업할 때 사용을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종이교과서와 글쓰기, 읽기 등 아날로그 교육방식을 재도입 확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AIDT의 사용 결정 또한 재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장관님,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청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큰 변화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는, 사실 오해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사실 장관님께서도 홍보 부족이고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어요. 정말 과연 그런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0년도에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니까 계속 홍보가 부족했다고 충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당시 비판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4대강 사업?

장관님,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그 분야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MB 정부의 인식 부족이 문제였지 아무튼 홍보 부족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실 이 AIDT에 관한 것도 일각에서는 이주호 관 교육계 4대강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주호 장관만 AIDT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홍보 부족인지, 용산에서는 홍보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 해외에서도 이 AIDT 사업을 추진하나요, 안 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번 해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동의 청원서에도 해외 사례를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웨덴에서는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핀란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종이책이나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표현이나 비판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학계 의견을 수용해서 필기체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숙제를 낼 때 핸드라이팅, 손으로 직접 써 갖고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도 종종 냈었는데 사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교실에서 태블릿,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교실 내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각계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문해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걸 한번 보시면요, PISA입니다. 아시겠지만 OECD에서 PISA라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2021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2023년도에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비전 보고서라는 것을 펼쳐 냈는데 AI 기술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나 규제나 로드맵 없이 교육 같은 공적 부분에서 바로 수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한 빌 게이츠도요 자기 아이한테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그것보다는 책을 읽을 것을 많이 권고했거든요. 컴퓨터 사용을 굉장히 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말 아까도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에 관한 어떤 기술진들, 엔지니어를 길러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용 면인데요. 실제로 효과성이 그만큼 검증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AI가 없는 AI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두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답변시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질의하시면……

○강경숙 위원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지금 마침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어떤 파일럿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이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 자신 있게 효과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납득 가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일단 외국의 사례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사례들도 있지요, 국가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그런 활용을 해서 수업에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것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작용도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의 사례도 많은데 반면에 독일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주가 AI 디지털교과서 시스템을 적용했고 또 미국에서도 몇 개 주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체제를 구축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든 간에 AI 디지털이라는 기술도 이걸 잘 사용을 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교육과정과 연결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연수를 받아 가지고 국가 시스템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제안들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사들의 연합체인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교사들의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찾아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강경숙 위원 혹시, 가능성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할 때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IT 기술이 훌륭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IT의 역량을 잘 결합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관님, 혹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AI 디지털교과서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고요. 2025년도에 초유의 전면 도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고 그러시고 아까 영유아 유보통합은 세계 최고라고 그러시는데, 세계 최초·최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이런 걸 다 연구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보시면 아까 AI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챗봇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AIDT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챗봇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유사 AI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반복을 해서…… 그전에도 CAI라고요, CAI나 CAT라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이라든지 컴퓨터 어시스티드 테스트(computer assisted testing)이라 그래서 CAI라든지 CAT가 그전부터 계속 도입이 됐었고요.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서책이나 종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AI 챗 GPT 같은 것도 보면요 질문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컴퓨팅 사고 능력이거든요.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책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사고를 더 많이 깊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이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계속 반복을 해 가지고 어떤 답을, 정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최고·최초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 위원 장관님, 솔직히……

잠깐만요, 벌써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강경숙 위원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알고리즘 설계 시안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설계

시안을 공개하시고 단순 반복 알고리즘이면 장관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말씀하시는 컴퓨터가 지원하는 오래된 그런 반복적인, 또 마스터리 러닝(mastery learning)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마스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개념을 파악하면 그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워낙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하는 그 단계로 가면 AI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것, 알고리즘적인 것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답을 건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또 개발사에서 적절하게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고리즘 설계 시안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먼저 짧게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시지요.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의 깊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서 답변 시간을 제외한 것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원인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위원들의 어떤 발언 권한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장관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간결하고 조금 더 짧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것을 좀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오늘의 논의를 조금 더 점검해서 확인하고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신 말씀 제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을 저희가 운영 변화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정부 측에 주어진 시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목표에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던 것이 저희에게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 답변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을, 상호 존중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시간의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앞에서 의대 정원 관련한 질문에 보태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

쫓아보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4년 예고제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입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게 예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을 어쨌든 늘려야 된다,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피해는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의원실로 의대생, 부모님, 학생 또 실제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늘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고 호소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1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너무 평온하게 뭔가 새로운 변혁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묻히고 있어요. 누군가는 의대를 더 가고 싶으니 정원이 늘었으면 좋겠고 누구는 의사가 늘었으면 좋겠으니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것들에 얽혀서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너무 무시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정원 증가하는 그 신청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각 의과대학에서 정원 증원하는 신청서 제출한 것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보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여전히 안 보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의과대학에서 증원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반시설이나 교수 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보내 주고 전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보내 주고 계세요. 보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세 차례 국립의과대학 교육 여건……

○진선미 위원 보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보내 주세요. 지금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계신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의대 정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난 R&D 예산이 축소되면서 기초과학에 그렇지 않아도 대학원생들이 부족한데 그나마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고 경력도 만들어 줄 수 있는 R&D 예산이 몇 조씩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의 교수님들이 전부 지금 기초과학 인재들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낙담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부장관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직은, 저희는 당연히……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지요? 없었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고요? 말이 됩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앞으로는……

○**진선미 위원**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때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면 기초과학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 않아도 의대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한데,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유치원에 의대반이 생긴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런 데서 저희는 그 부분을 사교육의 대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진선미 위원** ‘하고요’요?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지난번에 이미……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몇 개월 동안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아, 기초교육계에서 끝없이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교육에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안 하신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고민해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11개 하는데……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의대개혁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이만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육에서?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기초과학의 화학·생물 이런 데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 우리 한국 학생이 없대요, 거의.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웬 유학생들로 그걸 다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장관님,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무슨 전수조사 말씀……

○**진선미 위원** 의대 정원 확대에 인해서 기초과학계 쪽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상의해 보셨지요. 그런 것, 그게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의대 정원을 뽑는 것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입생들이 전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원 그대로에다가, 증원된 정원에다가, 이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입니까? 그러면 무슨 실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자료 주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어차피 답변은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다 끝내고 답

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만 여쭙볼게요.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해서 수렴 결과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를 꾸리든 무슨 조사를 하시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진선미 위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난해에 미래교육인재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는 논의를 해 왔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인력이나 어떤 예산 확보가 더 많으면……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의 기구를 좀 확장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기구 확장은 사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여쭙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NEIS로 민원서류 발급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보좌진 중의 한 친구가 자기 임용서류를 내려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민원서류들이 전부 퇴직자들의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몰랐습니다.

○**진선미 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부탁해서 확인했더니 8만 5000, 고등학교만 확인해서 8만 5000건 이상이 퇴직자거나 아예 퇴사했거나 전근 간 사람 이름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요 위원님 쪽 질의하신 또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광풍이 사실 불었었고요. 그 배경에는 의대 정원을 한 30년 넘게 제한을 하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에 또 인재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의료개혁의 큰 배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1500명 규모로 해서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하고 또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공의나 답답해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저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제는 정말 꼭 좀 돌아오셔야 된다, 안 돌아오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렸고요. 정부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 교육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종결이 되면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인력 수급이나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과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함께 저희들이 지금 이공계 교수분들과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선미 위원 제가 질의한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 거고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지금 예 2초 남으셨는데…… 다 끝났네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진선미 위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도대체 장관님이 종결이라는 걸 어느 걸로 보는 거냐는 문제인데……

○조정훈 위원 자료 요청만 하시지 왜 질의를 이어 가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요.

○조정훈 위원 자료 요청은 원래 위원장님한테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시는 거라고요, 원래.

○위원장 김영호 저한테……

○진선미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는데 얼굴은 쳐다보고만 있고요 요구는 이쪽에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의대 정원 수가 언제 종결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모든 의대 의과대학에서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가 저희가 궁금해서요 6월 20일 날, 7월 8일 날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1개도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각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관련 된 서류 그리고 각 의대별 현황에 대한 부분, 현 정원 또 교원 일인당 학생 수 등, 저희가 아마 자료를 이미 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두 개만 언급하겠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7월 8일 날 자료 요구, 현황 요청한 것은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그리고 학교별 학생 수 등 등교·미등교 학생 수 현황 그리고 국립대 및 서울대·연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 휴학생 관련해서 1학기의 휴학 현황과 학년별 사유 이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진선미 위원님의 자료 요청, 해 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의원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교육부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히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청이나 국회 출석을 불응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장관님과 이배용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그러셨지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장에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교수 채용 다 됐어요? 그리고 의료시설 관련해서 다 준비됐습니까? 그게 안 됐다는 게 눈에 확히 보이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말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꼭 좀 돌아와 달라고 의사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의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본인의 위치와 직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껏해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인 의제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기구를 확장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현안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보느라 많으신가 본데 지금 국민들 당장에 힘든 것은 바로 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도 답답합니다’라는 말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기구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한테 합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민정 위원** 아니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꼭 제출 다 해 주시고 저희 방에도 똑같이 제출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 앞서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공통된 장관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홍보가 문제다, 학부모들의 오해가 많고 잘 몰라서 그렇지 설명을 잘하면 아마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새롭게 하는 변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책도 훨씬 더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걸, 서책형 종이교과서를 교체하는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완전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병행하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런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들이……

○고민정 위원 2025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한 이삼 년 후에는 전면 실시한다고 저한테는 보고가 왔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3년 정도까지는 그냥 병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에 가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엄청난 예산을 다 쏟아붓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시겠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의 수업 변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정말 이걸 활용해서 수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또 그에 따라서 AI 교과서의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서책형과 AI 교과서를 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미 현재에도 학교에서는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장관님이 임기 내에, 즉 윤석열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그냥 보조로 활용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병행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보조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들이 보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서책형 교과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그때 가서는 내가 장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무책임하시면 안 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고민정 위원 그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안 되다니…… 뭐 어떻게?

○고민정 위원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단……

○고민정 위원 지금도 이미 보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빈도를 높이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넣어서 보조교재 정도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과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지금 학부모님들은요 서책형 교과서를 이 디지털교과서로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모두들 반대하시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 서책형의 몇 페이지에 있는 걸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서책형으로 하는 거고 또 교사분들이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훨씬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행한다는 것이고요. 이걸 한쪽을 폐지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보다는 일단은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를 장관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2011년에 만드셨던 자료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이 2011년에 만드셨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이 자료가 2023년에 이주호 장관님이 오시면서 다시금 지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2011년에도 역시 디지털교과서 추진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고민정 위원** AI는 아니었지만 디지털교과서 추진하셨는데 전면 무산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무산된 건 아니고요, 그때 시행하다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시범을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무산된 게 아니다? 무산된 게 아닙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고민정 위원** 무산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그때 추진을 했었고 아마 디지털교과서는 그대로 남아서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고민정 위원** 그 당시에 163개 시범학교를 돌렸는데 무려 6개 학교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다 무산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장관께서 이 디지털교과서에 혈안이 돼 있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면 교체가 아니라 그냥 병행하는 보완 수단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돼 있는가 한번 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돼 있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돼 있나, 현장 의견 수렴 돼 있나, 세 가지를 봤는데요 세 가지 다 안 돼 있습니다.

인프라부터 볼게요.

디바이스 지금 얼마큼 다 보급돼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디바이스는 각 교육청마다 1인 1 디바이스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당수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상당수 보급이 돼 있는 걸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1인당 보급 대수가 0.5밖에 안 됩니다. 한참 못 미치지요. 전북, 제주도 마찬가지지요. 인천, 세종도 그렇습니다. 1인 1 디바이스가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인터넷 속도 구간별 학교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그냥 PDF 파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도 아마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학생들이 구현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속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속도 목표가 얼마큼 돼야 된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고속 무선네트워크는 100% 구축이 목표고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디바이스와 함께 네트워크도 100%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목표 속도가 얼마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목표 속도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고민정 위원 어떻게 학교 상황마다 달라요, 교과서가 다 똑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고 또 작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용량이 예를 들어……

○고민정 위원 뒤에 누가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담당자가 좀 말씀하시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네트워크 망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학교이나 소규모 학교이나, 즉 학생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수학·영어 수업을 옆의 반에서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접속자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구되는 GB의 속도가 다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학교에는 스쿨넷이라고 그래서 1GB 망이 거의 다 깔려 있는데, 다만 이게 1GB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섭 현상이나 중첩 현상이 있어서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에서 500 이렇게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구동이 되려면 사실은 목표치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검인정 중에 있습니다. 신청된 부분들에 대해서 담겨 있는 용량이나 구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컨대 동영상은 얼마나 담았느냐, 사진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과 구동의 속도가 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GB 미만이면은 우리나라 목표로 봤을 때는 한 38%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1GB에서 2GB 사이가 좀 필요하더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상황과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검인정되었을 때만이 목표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의 각 학교 1만 2000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망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속도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 내외의 단순 부품 교체로 가능한 학교가 상당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G라 그래서 별도로 갈아야 되는 거 있는데 이것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네트워크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가해서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디바이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시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디바이스는 돼 있는데, 다만 이 디바이스도 소요 연한에 따라서 사실은 배터리 소요 용량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속도나 유지 시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적용되는 것들은 저희가 초등 3·4,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추정해 보면 한 17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들한테 제공되는 디바이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고사양의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그 자체 부분과 네트워크 망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디바이스나 인터넷 속도 관련한 자료는 그러면 다시 주십시오. 제가 있는 자료에는 디바이스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0.5대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에만 돼 있는 자료인데 그렇습니다. 제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속도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1GB에서 2GB 정도 사이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GB 초과하는 초등학교 거의 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을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내년부터 시행하신다면요. 그러면 2주 만에 되고 두 달이면 되니까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면 다 됩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게 23년도 한 2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아니요. 장관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걱정하시는 인터넷망이나 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육청도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시고요.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마다 조금 들쭉날쭉한 준비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교육부가 거의 매달 점검을 부감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나 또 디바이스 문제는, 인프라 문제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님이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주신다고 해도 수많은 부모님들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로 키우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디지털 기기에서 멀어지게 만들려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과 같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늘리게 하려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더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교과서로 다 바뀌 버리겠다. 맨날 예산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호소를 하시면서 도대체 이 디지털교과서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인가.

그리고 장관님은 이미 아이를 다 키우셔서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뒤에 있는 부처 공무원들이나 장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생명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딱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도입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의 활동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실은 교사들이 그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면 지식의 전달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왔을 때 수업의 변화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인간적이고 활동적인 측면이 더 강화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참고로 고민정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녀들 좋은 교육시킨다는데 왜 이렇게 절규를 하시겠어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아버지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잘 알아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꼭 새겨서 이번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더욱더 인간적인 교육이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목소리를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새로운 질의 답변 방식도 도입하시고, 저희 교육위 분위기가 어느 상임위보다 굉장히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시간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했고 아까 중간에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신 부분이 계셔서 저도 의사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질문시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당 위원님들 한

두세 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질의시간을 초과해서도 계속 자료 요구 요청하시고 중단하지도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정리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자료 요청은 질의시간 끝나고 나서 한 25초 동안 별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그럼요.

○서지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자료 요청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만이 아니라 사실상 질의에 가까운 내용들을 계속하시는 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성국 위원 아니, 질의는 할 수 있잖아요.

○문정복 위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조정훈 위원 아니, 말 같은 말이라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정성국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잖아요.

○서지영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지는 마시고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서지영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요.

○서지영 위원 가능하면 저희는 그 시간을 존중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용된다면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저희가 원칙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위원장님께 시간 할애를 요청을 드려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서지영 위원님께서 국회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우려와 목소리를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의 주질의 시간을 제외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굳이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원칙을 예외 없이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해서 발언시간에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7분을 드리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5분 이상씩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답변시간을 포함시켰을 때는 주로 끝나고 1분, 2분 추가로 시간을 드렸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되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10초, 20초가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용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 지연되면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기다리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많이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 제가 힘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야당 위원으로서 다시 전투력을 불살라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생인권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생 인권도 교권

보호도 둘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을 못 만들게 되거나 조례를 다 폐지해 버린다면 독재 시대의 학생 인권을 무시했던 교육 현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기가 하겠습니까마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뽀 맞은 것은 뭐 아주 예사로웠고요. 또 매 맞는 것들 너무 예사로웠던 설마 거기다 다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게, 교권 보호도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학생 인권을 침해하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잘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둔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좀 강조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도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또 교원단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최소 직제로 인한 업무가 불능이다. 정성국 위원님께서도 전에 또 위원회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야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난맥상을 겪고 있다.

이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매우 낮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이란 게 있지요, 위원장님?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김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청원 관련해서 올라온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청원은, 20만 명에 해당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문수 위원** 교육과정 20만 명, 교육정책은 10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청원 자체가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습시다.

○**김문수 위원** 아닙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20만 명이 넘으면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어떤, 그러니까 요청을 하게 되지요.

20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로 많이 동의가, 최근에 국회에서 130만 명이 동의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찌고저찌고 그 청원 건이 올라온 것 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김문수 위원** 국회에 청원 건을 누가 제안을 하면, 이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국민들 130만 명이 거기에다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청원 건에 제일로 많이 동의된 게 몇 건 같으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은 하나도 없고요.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16건인데 최대 동의 건수가 1770, 최소 동의 건수는 0입니다.

○**김문수 위원** 1700명 해 가지고 언제 10만 명, 20만 명 돼서 이게 안전으로 되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정책에는 제안 자체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 주는 상징

적인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 우리가 진행의 과정이 많습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실제로 저희도 사회적 합의 또 중립성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만드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이신데 실제로 현안을 다루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두 시간 회의를 막 네 시간, 다섯 시간 해 가면서 합의를 일구어 가는데 지금 그래도 많은 건수들이 최대한의 토론 시간을 해서 이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의 핵심 이슈들이, 그것을 조정하고 또 하나의 현안으로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다루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요. 다음 가을서부터는 전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소통 기간을 갖게 됩니다.

○**김문수 위원** 정대화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김문수 위원** 포함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 드리고요.

저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국가교육위원 21명의 추천 방식과 경로를 보자면 견해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견해가 다르다는 데에서 생각을 멈춰 버리면 사실은 국교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론장을 열어서 말하자면 국민적 또는 사회적 공론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기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확인되고 그 이후에 충분한 숙의와 논의와 공론을 통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다른 의견에서 공감대와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나 기존 의대가 있는 곳에는 너무 많은 증원을 할 수 없으니 제발 증원 숫자를 줄여달라고 아우성이고, 저희같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대가 없어 가지고 제발 신설 좀 해 달라는데 신설해 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기존에 있는 데 증원 수를 좀 줄여서 없는 곳에 신설해 주면 자동으로 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같이 의대가 없는 이런 신설 의대가 필요한 곳, 어떤 계획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특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전남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서 전남도에 단일

의대 신설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언제 협의해서 그게 결론이 납니까? 최소한 전남 신설 의대 티오 몇 명 이것은 언제쯤 결정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은 일단 2000명 증원이 배정된 상태고 신설에는 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갈등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완결이 되면 그 이후에 어젠다로 아마 이 문제가 논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는 설령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의사분들이 그 지역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을 지방에서 신설해서 배출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역의사제도의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또 정부의 목적과 부합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계약형 지역필수의료제인데요. 이것은 개별적인 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 강제하는 요인을,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하는 그런 제도로, 그것을 복지부가 아마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해서 지역의 의대들이 지역 출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을 우선 선발을 하면 그런 경우에 지역인재 선발로 들어온 의대생들은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두세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지역의사제가 추구하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인재 전형을 더 확대한다거나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지금 제도보다는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그 지역인재를 뽑으면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사가 가지고 지역인재형으로 입학한 다음에 졸업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의사제로 해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의사로서 병원도 그 지역에서 최소한 10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도입할, 지역의사제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복지부가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또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복지부장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달에 교육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전직 교육부 출신 등이 포함된 골프·향응 접대 관련 건으로 감사를 했고 수사·고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발령을 또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담당관이……

○김문수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장관님이 일주일 내로 낸다고 확답을, 속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시든 사유를 정확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단 담당관이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감사관직무대리 안상훈 교육부 감사관직무대리 안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회에 자료제출할 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취지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그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나 감사 또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수사·감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조금 있어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익명 처리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해서 개인이 또 특정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수사·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을 간곡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혹시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감사실에서?

○교육부감사관직무대리 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문수 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포함된 과거 교육부 기조실장도 이런 골프 관련 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주장도 했고 이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관련 건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감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김문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자료 사항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원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이배용 위원장님, 국무회의에 참석 권한이 있으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혹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 교육에 끼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없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자랑스럽게 없으시네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진선미 위원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누가요?

○문정복 위원 위원장이, 아까 화내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제가 왜 화를……

○문정복 위원 화내신 거 모르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화를 낸 건……

○문정복 위원 아니, 진선미 위원님이 화내셨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배용 위원장님 말고 진선미 위원님이.

○문정복 위원 아, 진짜……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질의 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조금 이따 이것 끝나고……

○문정복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2년 되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요?

○문정복 위원 예.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혹시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주 몇 회나 출근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주 몇 회? 저희 상근입니다.

○문정복 위원 상근이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주 5일 다 출근하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이배용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좀, 취임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 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문정복 위원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말씀드

리겠습니다.

장관님, 2021년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뭐를 얘기를 하셨냐면, 대학 연구 부정 관련해서 연구 부정 의혹이 있을 때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인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다시 좀 파악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그게 훈령이 개정이 안 되다가 2023년에 개정이 됐어요.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 7월이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 사망으로 인해서 정말 교육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때였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들이 훈령이 잘 개정이 되었는지 미처 체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자료시스템으로 해서 개정 이후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단 1건도 없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지침안이 2022년 2월에 예고한 지침안과 2023년 7월에 시행한 지침이 달라졌어요.

아셨습니까,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방금 보고받은 것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서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정복 위원 그러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규제법정주의……

○문정복 위원 뭐 어떠어떠한 이유를 달았어요, 장관님. 달았는데 뭐냐면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 조사 실시 요청 근거를 2023년 7월에는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행령을 고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냥 보호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그럼 뭐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게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문정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시점이 아주 나빠요, 시점이.

어떻게 됐는데 2022년 2월 달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장관님 계실 때 7월에 그 근거가 삭제되고 통과가 됐어요, 시행령이 지침이.

이거 누구 좀 비호하려고 그런 겁니까? 여사님 비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거 아니고요.

차관님이 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차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감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게 2021년도에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제법정주의의 위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정복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결과를 반영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문정복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정복 위원 그럼 사립대학교에서 학위 관련해서 연구 부정이 있는 거 그냥 다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다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없앤 것은 학위논문 부정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눈감고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 됩니까?

적어도 사립대학교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등록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 부정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장관이 적절하게 연구에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지금 교육부가 삭제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것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사님—문정복 위원님—말씀대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에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문정복 위원 하필이면, 규제심사위원회가 하필이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촉발된 이 문제를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정부일 때 그 규제가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해하실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문정복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같으면 이해하시겠냐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정복 위원 이게 오비이락이 아니에요. 딱 맞아떨어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권한이……

○문정복 위원 그 여사님 보호하려고 이것 삭제한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걱정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행사할 권한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간의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요.

○문정복 위원 규제심사위원회 누구랑 통화, 누구랑 의논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적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걱정 절차인데 규제심의위원회 어떤 파트의 누구랑 그것을 의논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구체적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정복 위원**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그 규제심의위원회 위원님 저희 방에 데려와주시고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교육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같이 들어오세요. 같이 들어오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 가서……

○**문정복 위원** 차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제위원회의 이 문제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차관님이 같이 해서 저희 방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딱 맞는 시간에 이렇게 지침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절차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찾아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무릇 공직자는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안 매는 거예요.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 어마어마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그 대학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총장이 선임이 되어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시점인데 교육부가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유보다가 이 지침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같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절차가 진행된 과정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하셨는데 괜찮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정성국 위원**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냥 넘어가시지요.

오늘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조정훈 간사님이 SNS에 떠돌고 다니는 영상 하나를 오늘 공개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중독 관련된, 저희 교육 쪽……

○**조정훈 위원** 청소년 SNS 중독 영상입니다.

○**고민정 위원**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동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일단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렇게 큰 이슈가 불거졌는데 국교위 대응은 뭐 하셨냐라고

질문하셨고 이 위원장님이 대응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의대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지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이라든가 의료 정책의 여건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 저희가 이런 것을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다각적인 심층적인 배경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이게 실효성 있게 저희 안을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이 의료개혁특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범부처 특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과 또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다루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규모의 작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이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루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한 분께, 정대화 위원님께 질문해서 답변 과정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 과정과 숙의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김태준 상임위원께 질문드립니다.

정대화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것하고 2028 대학입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전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충분히, 하루에 만나면 5시간 이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 현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집중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자칫 마치 사회적 합의를 잘 안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중장기 발전 방안입니다. 그것을 내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예를 들면 숙의 과정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를 우리가 해서 사회적 합의에 많이 부합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발전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교육부 오석환 차관님, 아까 문정복 간사님이 지적하신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국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리고 마지막 공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규제심의위원회의 제안 또는 요청 이런 건데요.

두 가지, 규제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교육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규제심의위원회의 제안 또는 요청이 구속력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인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학술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다양한 지침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된 게 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행정예고하고 법제심의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체 규제심사가 있었고요. 규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체 규제심사 그리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국조실의 규제심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러한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예고된 사항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과잉 규제 요소가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규제심의위원회에 교육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규제심의위원회가 자체 규제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제처의 법제심사 관련해서 협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조실의 규제심사까지 있습니다. 국조실의 규제심사 의견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변경사항이라고 저도 동의하니까 문정복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포함해서 이것은 교육위 위원님 전원에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제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질의하셨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염려가 크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AIDT가 기존 스마트폰의 앱이나 아니면 챗봇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수업에 활용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학업 진도나 역량이 정말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AI 디지털교과서 기술로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이 된 것이지 이게 스마트폰이나 챗봇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술이 적용되면 교사들은 오히려 지식 전달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훨씬 더 인간적인 상호작용 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동 중심의 놀이교육이나 또 고학년의 경우에는 토론식의 고차원적인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은 교육부도 똑같이 공감하는 거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아이들이 정말 로봇처럼 그냥 스크린만 보고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좀 귀에 밝힌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떤 위원님인지는 기억 못 하지만 이주호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부모들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국민 이기는 정치 없듯이 학부모 이기는 교육부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학부모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 드리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오해의 근원이 뭔지 한번 보시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AI로 상징되는, 디지털교과서로 상징되는 최첨단 기술을 우리 교실에 넣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 SNS 휴대폰 등으로 상징되는 이 매체에 중독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중독을 악화시키지 않겠냐라는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부분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두 가지 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하려면 전제조건은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 기구를 잘 활용하면서도 중독되지 않고 또 거기의 부작용을 잘 체득해서 디지털 기술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인간적인 부분의 성장을 계속 할 줄 아는 학습자로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민성인데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전제조건입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의.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강화해야 되고 또 강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우려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이어 가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나, 짐작건대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교육 기술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자, 이 원칙에 반대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는 거지요.

관련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강경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또는 SNS 접근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중학교 이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고요. 스페인이나 대만 등에서도 스마트폰 규제는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교과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것은 차단할 계획입니다.

○**조정훈 위원** 고백하면 저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 중의 하나인데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걸 말해도 되는지…… ‘인스타 그만해라’ 맨날 싸웁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한다? 이것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의 오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뒤에 디지털 교과서가 확산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상영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상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듯이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 도입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꼴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작용에 눈감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인권위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로 보고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율할까, 저는 휴대폰 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프랑스처럼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고 또 스웨덴, 스페인,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도 15세 이하 중학생에게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정한 SNS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법률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실 미디어나 SNS에서 지나치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또 디지털 기술에 중독이 되거나 하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학습의 도구로써 활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학교에서의 활용, 프랑스처럼 학생들 금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또 교육부도 참여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으로서 미리 예단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회적 논의로 활성화, 논의를 해서 국가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또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은 분명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요새 국회 청원이 인기인데 이것 한번 올려 보면 저는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이것 동의할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저희는 법안 발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인데도 15세 이하 스마트폰 전면 금지 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병행해서…… 디지털교과서 최초 도입 동의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만큼 강하게 나가면 좋겠고요. 관련 법안을 저희가 만들 텐데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협의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서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중독 문제이지 않습니까? 4대 중독, 스마트폰 마약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AI가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학생건강정책국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아이들의 상담이나 그런 기능들을 학교 내에서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또 앞에서 말씀하신 스마트폰 규제의 그런 취지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질의가 끝났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4시 26분이니까요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입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김대식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18년~22년 연평균 교직원 300명에게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명목으로 1인당 3000만 원 이내, 총 346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교부금을 국가 세금인데 이렇게 낭비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기초학력 진단이 들쭉날쭉하는데, 2023년 6월 21일 날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24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실시된 책임교육학년 맞춤형 학습성취도 자율평가에서 각 시도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이 지역 교육감 성향에 따라 큰 폭 차이로 이렇게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 실시하면서 시·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도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도 좀 줄이고 또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도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부 잘하는 약, ADHD 치료제 이것 한번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 오보고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이게 진료 인원 중 10대 청소년 비중이 전체 인구 35.6%에 육박할 만큼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환자가 나오면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기가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없는데도 테스트해서 기업을 자가진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울, 부산 이게 급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하든지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랑도 좀 협의를 하고 바로 점검도 해 보고 또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RISE 사업, 글로벌대학30 이것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라이즈 사업 또 글로벌30 프로젝트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자체에 넘기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짝 계시는데 지자체로 넘기면 이것에 대처할 능력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래서 시·도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실시를 한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는 각 자치도나 시에 상당히

대학 행정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교육혁신지원관을 파견하기도 하고 해서 역량을 키워 드리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요. 몇몇 시·도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까지 지역 자체를 살펴봐도 대외협력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서 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제교육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옵니까, 지금 130개국에서 오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작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인도 이 순으로 왔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시간은 못 드리고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130국의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후 관리가?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예, 저희가 지금……

○**김대식 위원** 이분들이 귀국해서 교수를 한다든지 어디 정부 요직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가,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예, 저희가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문 배출은 한 9000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연락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해야 되고요. 각국에 10명 이상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왔던 나라는 동문유학생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앞으로 9000명 정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 저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연락을 누가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써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위원장 김영호** 현지의 대사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유학했던 한국 유학생들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문들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잘 한번

반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교육위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학생들, 청소년들 사용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계 종사자의 한 명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저도 생각했던 바인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말의 하는 데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대학 안에서도 어쨌든 학생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제라기보다 약간 학생들이 스스로 자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적극 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장관님도 대학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두 분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면 교육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AIDT 관련해서 장관님하고 사실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 공격적으로 질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AIDT 사용이 교실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민정 위원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교실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준혁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물론 하실 말씀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아까 저에게는 교실혁명이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경제학자시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아실 텐데, AIDT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것이라라고 아마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모순이 되는 건데 보조수단이 혁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어떻게 보조가 혁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수단으로서의 AIDT가 교사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올해도 3800억이나 투여가 되고 내년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고 3년 동안 또 그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치게 되면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조수단으로서의 교육자료, 교육환경체제를 만드는 데 1조 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다시

장관님께서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혁명이다’라고 또 강변하실 수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인식 자체가 오히려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혁명이다, 보조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AI 교과서가 보조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 것은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인간이 아닌 AI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개별 맞춤형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교실에 교사가 1명 있고, AI 보조교사가 20명 30명 있는 그런 새로운 교실 형태로 혁명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까만 새로운 수업방식,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들의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토론만 하거나 활동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전달을 AI 교과서가 해 준다면 훨씬 더 폭넓은 또 과감한 수업의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조수단이지만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보조수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장관님, 우리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인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 천하위공, 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다, 레스푸블리카(respublic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공동선 공공선을 추구하는 건데, 장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 일을 하는 분들은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한다 그 부분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앞서도 질문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장관으로서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관으로서 국가의 공동선 공공선을 실현해야 되는 건데 사익이 우선한 부분에 있어서 충돌했을 경우에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AI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좀 서두르는 것 같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나와서 검증을 한 이후에 충분히 연수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 적용도 해 보고 시범사업부터 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올해는 대규모 연수를 하고 내년부터 특정 과목 또 특정 학년에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큰 변화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과감하지만 접근방법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준 위원 취지는 좋아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세대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이 에듀테크 기업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아이스크림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냐 봐요.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AI 교과서의 전반적인 교과서를 만든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에듀테크 회사지요, 거기가.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교과서를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가 중심해서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간기업이 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고 AI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교과서 출판사들이 다 민간 업체들입니다. 정부가 검인정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도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민간 업체들이고요 말씀하신 아이스크림도 아마 교과서 출판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도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미디어가 공교롭게 오늘 코스닥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교과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그리고 제가 백승아 위원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교육연수만 해도 3818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드렸듯이 김진표 의장님이 발의한 그 법안으로 작년에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대규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사업으로서의 AI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부분이 지금 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봐요. 이렇게 수천억 원의 투입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혹시 모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장관님이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AI 교과서가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받아봤을 때 AI에 대한 교육 전반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국가의 공동선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의 목표가 교육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장관님, 그것 꼭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선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익의 충돌은 저는 100% 없다. 제가 취임할 때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장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익과의 충돌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선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냥 통계만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을 질문드리면, 여기 영어 보조교사 선발·지원 보면 시도별로 죽 선발·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94명, 부산 58명 죽 나오구요 그런데 울산은 1명이에요. 그리고 세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별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 통계를 또 보면 울산은 1명, 강원은 14명, 대전은 2명, 전남 같은 경우는 또 34명입니다.

이래서 영어와 중국어의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은데 시도별로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학생 수에 비례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수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시도별 편차가 너무나 많이 나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도별로 편차가 덜 나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교육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EPIK 사업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시도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을 뽑고 원어민을 사전연수해서 시도에 보내 드리는데요 시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수요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이 수요가 울산이 1명이라고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1명 있는 건 아니고요 각 학교별로 자체 뽑아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중국어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어 보조교사는 중국 측에서 70% 인건비를 대고 우리나라에서 30%를 대는데도 학교별로 중국어 수요가 좀 줄면 원어민 교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도별로 또 교육청의 수요와 학교 현장의 사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학교별로 아이들이 동등하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류혜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이렇게 최근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권침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도 굉장히 증가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권 5법 대책을 내놓고 교사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대응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제 함께차담회라고 해서 매주 교사들과 만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교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계속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부담을 해소해 드린다거나 또 수당을 올려 드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는…… 저희가 이제 서른세 차례까지 했는데요 매주 어려움들을 호소하시고 또 매주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쪽 교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도 1년여 동안 상당히 교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정부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는 그런 기반이 지금 구축됐고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서이초 이후에 몇 번 미팅을 했을 때는 교사분들이 계속 그냥 오셔서 우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저희들이 듣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요. 교육부가 정말 소통 기반으로 교사들과 대화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걸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교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은 결과론적인 문제고 근본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위험 단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예방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서 해소하는 정책, 그것 없이는 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한 반에 적어도 요즘은 두세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교사분들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의 마음 건강의 문제부터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교육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데이터를 민간에 모두 개방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식 자문기구고요, 위원 구성도 교육부 내부에서 검토해서 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그동안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직책을 가리고 제출을 하셨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요, 분홍색 부분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테크빌교육 이 두 기업은 이주호 장관님께서 장관 되시기 전에 본인께서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 때부터 함께 일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1차·2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보시면 장관님이 새롭게 추진하는 모든 디지털 정책에 에듀테크 기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관이 이사장이었던 사기업 아시아교육협회 보실 수 있고요.

장관님이 KDI 교수로 재직하실 때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대구 하이터치 하이테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연구는 대구 중학생 500명한테 AI 학습기기 지급하고 효과 측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아이스크림 기업에 기기 대여료를 KDI에서 1500만 원, 아시아교육협회에서 2000만 원 지급했고요. 이것 얼마 안 된 상황이, 아이스크림이 중등 학습기기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약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면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함께하던 사업, 디지털교과서, AI 기기 만들던 이런 회사들이 공교육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 이해충돌이라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지금 교육부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공교육에서 에듀테크 산업 육성하고 에듀테크 수출까지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것 교육 데이터 공개도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 데이터 가지고 돈벌이 하라고 국가에서 나서서 지금 보장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 성적, 시군구별 성적 이것 다 공개한다고 하시면서, 전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랑 교사들한테 의견 물어보셨나요? 현장 의견 들어 보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개인정보 다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먼저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이사장으로 있었던 데는 사기업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교육 변화를 위한 기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가지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델을 가지고, 특히 고아원이나 또 학교 중에서도 저학력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혁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히려 기부를 했고요. 제가 사익을 거기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으로서는. 왜냐하면 그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라는 말씀은 정말 오해시고요. 그리고 에듀테크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의 파트너입니다.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그러면 학교와 대학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백승아 위원 잠시만요, 장관님. 저는 지금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공개하는 것 물어봤냐고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지금 즉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듀테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듀테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에듀테크는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한 교육 발전을 위한 산업입니다.

○백승아 위원 물어보셨냐고요?

○위원장 김영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를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학부모들……

○백승아 위원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사자라는 건 어떤 당사자……

○백승아 위원 현장 의견 들으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현장 의견은 충분히 전문가들이 반영을 해서……

○백승아 위원 아니, 전문가 아니라 현장이 전문가예요. 학부모가 내 아이 정보 공개하라고, 교사들이 내 학생 정보 공개하라고 허락했어요? 물어보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와 학부모의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는 다 삭제하고 연구를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민간에게 왜 정보를 다 공개하냐고요.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면 되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개인정보 공개하면서 데이터 사용할 사람 의견만 들으시고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민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간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고 연구원의 연구자들입니다. 연구자들이 충실하게 연구를 해서 교육 문제를 지적해야지 교육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것을 계속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면 덮어두겠다는 게……

○백승아 위원 개인 데이터 공개를 전문가 의견만 듣는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개인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다……

○위원장 김영호 혹시 필요하시면, 백승아 위원님……

○정성국 위원 그만하시지요.

○백승아 위원 해당 당사자들이 들어가야지요.

○정성국 위원 시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보충질의가 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저는 목소리를 더 좀 낮게 깔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서책형 하는 부분이 보조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보셔야……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종이교과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리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종이교과서가 안 없어지고 계속할 수도 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미래를……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또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과도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결국은 나중에 종이교과서가…… 지금은 병행을 하지만 나중에는 병행이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로 완전히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은 그렇게 결정 안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시행 시기를 보면 초등학교 1·2학년이 디지털교과서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무래도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생각해서 일단 3·4학년부터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를 아예 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초등학교 1·2학년을 디지털교과서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초등학교 1·2학년만큼은 디지털교과서를 만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나름 반영한 것인데 제가 그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교육부하고도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똑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은 배려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은 아예 그냥 중·고등학생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1·2학년 티를 벗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초등·중등·고등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도 충분히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개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장관님, 하나 제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지금 교과서 적용 시기가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가 우선 도입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어는……

○정성국 위원 특수, 특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특수 아동들만 적용됩니다.

○정성국 위원 28년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배려를 한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을 배려. 저는 그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는 과목 수를 처음 도입하는 수학·영어·정보 정도에서 끝내고 한 5·6학년부터, 5학년부터 확대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 수업을 아예 하지 않다가, 아예 하지도 않다가 그 완충이 되는 3·4학년은 전면 도입에 들어가는 자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발달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4학년은 적용하는 과목을 적게 한정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배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저희가 학년별로 또 과목별로 이렇게 단계적인 그 결 할 때는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아마 교원단체, 교총을 포함해서 의견도 좀 들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교총 회장 할 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고려할 가치가 있고요, 현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국장님들도 한번 꼭 그 부분 기억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드릴게요.

업무 경감 혁신안이 이번에 발표돼서 너무 현장에서 박수를 받고 있으신데 이것을 잘 실천하는 시·도교육청에 특별상 같은 것 제공해 가지고 시·도교육청이 더 한번 혁신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동기 부여를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이 교총에서 용역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좋은 방안이 나왔고 또 그 방안을 교육부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려면 또 교육청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의 업무 경감, 교총에서 제시한 방안의 핵심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행정잡무를 대거 맡아 가지고 대신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에 보다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제를 해서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것 꼭 좀 실천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주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4년 예고제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는 이미 모집요강이 확정되었으므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주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상담 등 더 강화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도 이후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올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4년 예고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정을호 위원**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잘 검토해서 가지고 이런 입시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의원실과 협의해서 좋은 법안이 나오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인데요. 장관님, 우리 20대 청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59.2%가 아침밥을 다 거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요새 살인적 물가 등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밥값이어서 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끼 이상 못 먹는 친구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186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 또한 지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교육부에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재정지원사업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학생복지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차원에서 더 많이 교육부에서도 신경 써 주고 이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천원의 아침밥 위낙 현장의 반응도 좋고 취지도 좋기 때문에 교육부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유보통합 혼란을 틈타서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혹시 포털사이트에서 유보통합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못 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해 봤는데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지금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정부 발표로 현장은 지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행태는 작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 문제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점은행제, 자료 PPT를 보시면 지금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별 플래너들을 운영해 올바른 교육 과정이 아닌 편법을 조장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있고 유보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 퀴즈, 과제, 시험 다 안 해도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 학점 이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너무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체크해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보육교사자격증이 남발된다면 장관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보통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 한번 교육부에서 점검하셔서, 혹시 또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단속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바로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한 교원 중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교사가 고 또 그렇지 못한 교사의 불인정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인사혁신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구해서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교육부도 정말 저희가 차담회하면서도 많은 제안이 있어서 그것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업별, 항목별 세부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선도교사 연수 참가 교사의 교직 경력 그리고 강사진 구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 요청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은 제가 장애 영유아 교육권에 대해서 유보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오나요?

보시면 대구교육청에서 6월에 동화구연대회에 일반 유아하고 특수 유아를 분리시키려고 한 담당자의 발언이 나오는데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5분 동안이나, 5분 동안은 너무 길다 이거지요, 동화구연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이나 배제나 거부를 당하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 진상조사하시고 책임자 문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바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6월 27일 날 교육부가 발표했지요.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에 보름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 발표 후에도 간담회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피드백도 계속 다 잘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또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또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까지 저는 좀 드는데 지자체의 보육재정과 인력 이런 이관 방안도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가 맞는지. 장관님께서도 사실 여러 교육계 주요 요직을 거치셨는데 실력을 제대로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가 이런 교육부의 여러 지도자들의 생각과 추진력과 열정과 진심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9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어요.

PPT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해 기준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는 1만 417명이에요.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면 그 대상 학생이 2만 명이 되는 거라 2배 이상이 되는 거지요. 잘 정말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교육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유보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빨리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 특수 부분입니다. 특수 영유아 아이들을 유보통합 체제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부가 좀 강하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협의해서 유보통합을 계기로 영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셔서 사실 좀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 이 두 쪽짜리가 다입니다.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건 이 두 쪽 계획이 전부고요.

실제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영유아정책국에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조직개편 요구를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영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은 아무튼 파견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과를 만들겠습니다. 행안부가 협의를 해 줘야지 만들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부도 전문인력이 아직은 없는 것인데 시·도교육청은 좀 더 많이 열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거든요. 그 부분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만 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실은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조기 개입도 중요하고 재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서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뵙고 영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이번 기간 동안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유아 특수교육 문제는 지금 행안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사회부총리가 행안부를 설득 못 합니까? 사회부총리의 위상이 있지요. 그것 좀 제압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정치를 총동원하셔서 꼭 설득해서 교육위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장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당연합니다, 그거는.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세대 NEIS 시스템을 통해서 초중고의 민원서류들을 출력하는데 21년도에 근무했던 사람 이름으로 발급이 되고 있어요. 벌써 8만 5000건, 처음에 이분들이 다 무슨 말이나,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권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위조잖아요. 본인 발급자의 명의가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닐 수 있다 이러지만, 아니 공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 발급인데 그 공문서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사과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필요하면……

○진선미 위원 확인이 아니라 명확하게 저희가 다 전달됐고요. 보도자료 냈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뒤에 아마 부처의 관련 실무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이게 지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리라 들었는데 그것 얘기 안 하신 겁니까, 디지털 담당관님?

이것 분명히 사실이라면…… 그러면 전제로 해 주세요. 사실이라면 유감을 표해 주시고 조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게 사실이면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NEIS 4세대 그것 가능하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장관님, 교육권의 확보를 위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지금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학교용지를 임의로 공공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확인…… 차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장관님께. 모르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모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에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시청에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청하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의 논의가 있어서……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끝나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교육부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와 상의 없이 이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상의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조례 진행 과정에는 교육부하고……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둔촌동이 1만 2000세대의 재건축 단지가 생겨요. 그러면 1만 2000세대면 최소한 3명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학교에 대한 수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적어진다고 해 가지고 중앙투자를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학교를 안 세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공한 건데 교육부는 하나도 모르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요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임시 변경, 경미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그냥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공공용지로 바꾼다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조례 진행 과정에서는 직접 소관 부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학교용지를 적정한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가 당연히 지켜 나갈 일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에 대한 변경을 권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된……

○진선미 위원 조치라는 게, 상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라는 말씀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지키게 합시다. 시간 지키게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발언을 딱 1분 넘겼어

요, 저는 1초.

○정성국 위원 아니, 시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1초 넘겼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잠깐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정성국 위원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났는데 하셨습니다. 지났는데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발언을 매듭을 못 지었을 때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자제시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시지?

○정성국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얘기하셔야지요.

○정성국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차관님, 둔촌동 사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장 김영호 이 현안은 분명한 것은 교육부, 교육청 현안이지 서울시 현안이 아니니까 차관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을 당사자이신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혹시 또 관련된 입장이 있으면 발언을 한 분을 드릴게요.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발언을 마무리할 때 1초가 남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느라고 이게 꺼졌는데,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발언의 기회를 얻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성국 위원 저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당사자이신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니, 분명히 발언을 하시고 계속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게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마무리를 못 하셨을 때 그 여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 드릴 건데요. 만약에 다른 새로운 이슈를 또 그렇게 질의하신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제가 그렇게 또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각자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백승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같은 관련된 질문입니까?

○백승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장관님께서……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하시려고요?

○백승아 위원 관련된 얘기에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면 발언하세요.

○백승아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이었는데 조정훈 간사님께서 ‘아니, 답변 더 듣자고 시간 늘리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제 발언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일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질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양당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상호 존중하시면서 이 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이배용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오전에 발표를 해 주셨어요. 맞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큰 가닥은 다 잡혔겠네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7월 말 정도에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7월 말에 내용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큰 가닥의 의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오늘 회의 종료 전에 달라 그래서 지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논의 의제를.

○고민정 위원 일단 말씀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교육 비전 전반에 대해서는 주로 여러 가지이지만 지금 논의해서 정리되는 단계가 미래 교육의 기본가치 및 방향, 저출생 대응 학생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교육개혁, 디지털 및 인공지능 시대 교육혁신 그리고 유·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만 중요한 게 초등 돌봄 확대 그리고 학제 개편이라든가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교권 보호 교원 정책 그리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위기 학생 회복 및 지원 강화, 미래 과학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유·초등, 중등교육에서 우리가 현안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은 대입제도 개편이라든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격차 완화 이런 정도입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모든 교육 현안들을 다 읊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여쭙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문위원들이 스물한 분 계시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전문위원은 스물한 분이고요.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 스물한 분이 입장 차이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요? 격론이

벌어진 것들도 있을 테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차이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병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그다음 질문하기가 참 어렵네요. 일단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여쭙게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고교 평준화 정책도 한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의 격차 해소라든가 또 하나는 고교 간의 여러 가지의, 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는 또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 소멸 문제하고도 연결하고 수도권의 과밀현상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 얘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제가 폐지한다 이러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건의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고민정 위원** 누구한테 건의하는 건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건의는 이제 우리가 국민 소통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9월부터는 대국민 여론 수렴, 전문가 간담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 가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건 전문위원들 간의 초안 성격의 것이고 그것이 9월을 거치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들 간에 정해져 있는 초안에 대해서는 저희 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건지 격론이 있어서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건지 저희가 감안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격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을 테니 주시기가 어렵다 하면 어떤 주제인지만 주시면 되고 정리가 끝난 사안들에 대해서는 끝난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2016년에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 위원회를 발족하셨는데……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2016년에 바른사회?

○**고민정 위원** 예, 제가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 기사를 제안해서 냈습니다, 언론 중재에. 제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본인은 참여한 적이 없으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주호 장관님은 발족한 인원에 들어가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바른사회……

○**고민정 위원**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고민정 위원 기억이 없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기억이…… 하여튼 기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쨌든 기사에 의하면 이주호 장관님 또 이배용 그 당시 총장님 등이 발족시킨 단체이다라고 하면서 이 단체에서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제 질문에 좀 집중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는……

○고민정 위원 못 들으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고민정 위원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혹은 반대하는 거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단문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 스스로의 소신과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은 제가 국교위원장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지금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한 이백여 명 가까이 계시고 또 참여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구성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무슨 말씀……

○고민정 위원 그 당시에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는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정 위원 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평준화에 대해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는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을 저술한 적도 있고요. 평준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돼야 된다, 다양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는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굳이 애써 지금 현재 정착이 되어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정책대로 하면서 또 고교를 다양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확실하게 답은 안 주시네요, 두 분 다.

그러면 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그 자료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대로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회의가 몇 차례 진행이 됐을 텐데 보통 그런 회의들은 회의록이 남을 텐데요, 그 회의록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 회의록은, 저희 본 위원회는 회의록이 남는데 그런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회의록이 없더라도……

이것은 자료요구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회의록 자체가, 이렇게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된 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직 정리돼서 나온 것은 지금 진행 단계기 때문이에요.

○고민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까 의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작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교부액이 75조 7000억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작년에 미배정된 금액이 10조가 넘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세출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 하느냐고 애먹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올해 어떤 것 같습니다? 올해도 혹시 기재부가 한 9월 중순 경에 미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올해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 68조 9000억을 예산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작년처럼 대략 한 10조가량을 또 미배정을 해 버린다고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난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어떻게든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기재부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게요. 장관님께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미반영 여부, 반영 여부 아직 협의는 안 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직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직 못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이제 벌써 7월이고 9월이면 세수 추계가 끝날 건데 9월 중에 반영 여부, 미반영 여부가 확정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시는 게 저는 시기상으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작년처럼 눈 뜨고서 기재부에 10조를 뺏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안정화기금이라도 있어서 했지만 이번에 그렇게 미배정해 버리면 정말 교육 현장에서 큰 일대 혼란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정화기금이 남아 있기는 합시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에요. 보면 2024년도에 일몰사업이 약 3조가량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이것 절대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대략 1.5조가 2025년 12월 이후에 종료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연장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서 6월 27일 날 발표하신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육, 늘봄학교 이거 재원에 대해서 대략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통령께서 사실 인구 국가 위기 상황을 말씀을 하셨고 또 저고위에서 인구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유보통합이나 늘봄 같은 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범부처적인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당국을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 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시·도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 세출 항목이에요. 보시면 경직성 경비가 83조 5000억이나 돼요. 어디서 빼낼 도리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세수는 계속 줄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면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재정 사항은 장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겠고요.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장관님, 저희가 드리는 특별한 부탁은 이런 예산 갖다 쓰지 말고 기재부가, 정부가 예산을 더 출연해서 이런 사업들을, 국가가 원하는 사업들을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고도 최대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헌법에 있는 교육 관련 조항, 교육기본법을 한번 꼼꼼히 보는 기회가 됐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비록 내용은 없지만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차별받지 않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요한 교육정책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를 다니든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 균등은 적용돼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법제상으로 여가부 소관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국회 때 거의 통과되는 수준까지 왔다가 통과 못 된 법이 있는데요. 지금 최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면 어떤 아이들, 많은 경우에 위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적어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통합된 자료 관리도 해야 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지 학교 밖으로만 나가면 아예 그냥 우리 교육부의 정보 네트워크에서도 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법부터 통과시키자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통합적인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왜 통과 못 됐습니까? 주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처음에는 여가부도 좀 반대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여가부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여건상 이렇게 마지막에 좀 통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통과 못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훈 위원 교육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국회 일이라서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우리 민주당 간사님도 큰 취지에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문정복 위원 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여야가 그때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김준혁 위원 제 첫 법안입니다, 1호 법안.

○조정훈 위원 저도 우리 김준혁 위원님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 SNS 제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요 장관님,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아마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이 법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 대안학교는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법에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안학교 포함하면 어떨까요?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또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정훈 위원 아니,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대안학교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해서……

○조정훈 위원 장관님, 제가 이때만큼은 야당이 되고 싶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야당 위원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좀 발진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어떤 학교 다니는지 갖고 차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크게 공감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대안학교 학부모라는 것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지금 제가 교육부에 대안학교 학생들 지원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안학교가 아직까지 공교육의 밖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차별받지 않을 교육받을 권리를 생각을 하면 전향적으로 교육부도 좀 이렇게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워낙 교육계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다만 정보가 없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자료는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의원실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가 교육청에도 알아보더니 청 단위에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서울시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또한 지역적 차별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

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장관님이 교육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라고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같은 취지 아닙니까,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하여튼 큰 방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또 공교육 체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면……

○조정훈 위원 공교육 체제에서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좀 한두 가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밖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예산이나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은,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요. 헌법에도 불구하고,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받는 아이에게만 써야 되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정훈 위원 자꾸 ‘만’이라고 하시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조정훈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안학교가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훈 위원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계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요? 저랑 차관님이랑 지금 헌법 해석을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따라서 지금의 대안학교 지원 정책은 헌법적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지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실행하셔야 된다고

됩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못 가졌는데 우리 조정훈 위원님의 짧은 이야기 속에도 굉장히 좀 방치해 놓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바로 이것은 좀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국회와 함께 교육부가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하고 또 해법을 찾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로써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당 위원님들 세 분, 또 야당 위원님들 세 분, 조국혁신당 위원님 한 분 해서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 3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드리는데 3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 운영을 잘 하셔서 아직 질의를 못 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당 위원님은 누구누구 신청하신 거지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식 위원님부터 시작…… 세 분.

원래 여당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뷔전이라서……

○정성국 위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봐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면 저……

○조정훈 위원 야당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당이 하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조정훈 위원님 아까 야당 위원님 같으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김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다 하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김대식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총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본위원회는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이 현재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 이제 네 분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결원이 돼 있지요. 왜 이것을 못 채우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건 아직 사안이 요즘에 발생한 게……

○김대식 위원 조금 이따가 이것 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교육단체에서 2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교총에서는 들어오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2년째 이렇게 공석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지금 교총도 못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왜 그런지 한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대학에는 시수가 있잖아요. 주 9시간, 6시간 이렇게 시수가 있는데 초중고는 없는 거지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초중고에서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주당 수업시수가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교사들에 과도한 수업시수가 부과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뭐 법을 개정하든지 교원의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명확히 규정하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들 간에 좀 시수……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3분 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사 출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셔서 그런데 성과급 제도 이런 효과적으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일부 지역에서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성과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보상하는 성과, 이런 보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RISE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글로벌대학 선정이 언제 발표를 하는지, 이번에도 몇 개의 대학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건지, 지역별로 안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시수나 성과급 문제는 저희가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또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시안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실과도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ISE, 글로벌 선정은 다음 달 말까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선정에 있어서 숫자는 10개 학교, 10개 대학을 이번에 하는 거고 저희가 지역별 안배는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얼마나 혁신적인 제안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 21개 위원 중에서 교사 단위의 단체는 두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많게 인정된 교총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교조하고 교사노조 중에 회원 수가 많이 있는 곳으로 그때 2022년 11월에 세 단체가 합의를 했는데 그 회원 수에 대한 확인이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교총회장, 지금 우리 정성국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또 교총회장도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라 교총회장, 전교조, 교사노조 세 단체가 합의해서 두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교조하고 교사노조연맹의 회원 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야 하는데 그건 정성국 위원님이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호** 끝나고 두 분이서 말씀 좀 하세요.

○**김대식 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학교를 중단했다고 학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1호 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내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대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내년에 이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이 도입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특수 아동을 위한 국어 교과과.....

○**김준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관님이나 실무진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장관님이 모르셨다면 굉장히 서운할 뻔했습니다.

저희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표 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 쪽 끝에 보시면 10만 9700명, 약 한 1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부족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때로는 보조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내용,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것을 또 장점으로 만들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중점을 갖고 있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좀 소외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취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나온 통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들이 실제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노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의 심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혹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우리가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요. 말씀하신 IQ가 70, 80 되는 아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의 영향도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들 지능 측정을 해 보면 상당히 낮은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사회 종합대책을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팬데믹 기간에 이와 관련된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게 됐어요. 학교 바깥으로 나가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이와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것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학교 밖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사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다 하는 지적이 노동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여가부에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자고 한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범부처적인 대응도 강화하도록 하고요.

특히 교육부는 말씀 주신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국어과부터 잘 개발을 해서 효과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꼭 해 주셨는데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대한민국학술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석학들의 총집합이고 학술원 회원님들이 우리나라의 학술 연구 발전과 그다음에 인재를 키워내는 데 너무나 큰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학술원장님과 130여 분의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전주 초등생 문제에 대해서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학생은 아픈 아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 자료 화면을 띄우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화면이 오죽했으면 그런 영상을 촬영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즉시 우리 교육 당국은 그 영상의 배포를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이 퍼졌고 그것이야말로, 무방비하게 영상이 퍼진 것이 교사의 인권도 아이의 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권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최근에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위기 학생 치유 체계에 대한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일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정된, 학생의 정서 교육에 관한 건데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의 아이들을 포괄하는 것인지, 초등생부터의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누적된 위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유아기 단계에서 또 유치원생 단계에서 이런 정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기에 좀 발견해 주시고 이들을 지원하고 또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너무나 시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가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담당 국을 새로 신설했고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학생건강정책국장이 이것 담당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지영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1분만 잠깐, 위원님들도……

○서지영 위원 허락해 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하신 내용이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교 안에 있는 위기 정서 학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 어떤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

다. 조만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령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맞춤형 통합 지원법을 포함해서 저희가 마음건강 3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백승아입니다.

저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사연수 강조하셨는데 교사연수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를 완성본을 직접 활용하고 제대로 학습하고 수업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실제 연수에서 실제 활용될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프로토타입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 보좌진 시연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프로토타입 교과서는 사실상 AI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AI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연수, 실제 사용될 AI 교과서를 못 만져본 교사연수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3818억 원이나 사용된 겁니다.

제가 의원실에서 6월 11일에 교육부에 관련 예산 사업 설명자료, 연수계획안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길래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교과서 이용료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MTN 뉴스 보시면 “AI 디지털교과서 ‘적정 가격’ 논의가 분주” 하고요. 10만 원 안팎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넷플릭스가 기본 타입은 월 5500원이거든요. 넷플릭스 구독료보다도 더 비싼 AI 교과서 가격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은 월 5000원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체들은 월 8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가격 최소로 하더라도 연간 6만 원입니다. 서책형 교과서는 지금 한 권이 1년 내내 쓰는 게 5000~8000원이거든요. 거의 10배가 넘어요.

그리고 이 교과서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강원도에서 기기 산 거 김대식 위원님께서 낭비했다 하셨는데 기기도 다 사야 되고요. 이 관리 비용도 듭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 남아돌지 않습니다. 작년에 10조 4000억 원 미배정됐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이 백년지대계 교육 이렇게 정책을 막무가내로 막 급하게 줄속으로 처리하시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에듀테크 업체랑 뭐 관계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떠돌 정도예요.

지금 국민동의 청원 AI 교과서 도입 유보해야 된다는 글이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에서 심사해야 됩니다.

실제 AI 디지털교과서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게 나온 이후에 충분한 현장 검증 거쳐서 도입 여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으신 지적이고요. 그렇지만 프로토타입이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검정을 받게 되는. 물론 좀 더 완성된 교과서가 AI 기능 같은 게 더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보완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제가 교사 출신이라서 동료들이 다 이 연수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의문을 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좌진들도 시연회 다녀와서 ‘이게 AI?’라고 많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아마 챗GPT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AI 교과서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챗GPT처럼 그냥 물으면 그냥 답을 꼭 다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아이들의 역량에 맞게 적합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서 학습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AI 튜터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백승아 위원 시연회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보였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시연회에서 아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의원실에다가 그런 기능의 상품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맞지요,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성국 위원 사회적 합의기구이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기구를 표방하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될 때는 이제 의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 정대화 상임위원님이나 김태준 상임위원님께서 그런 사회적 합의 형태가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 국교위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간 경우도 여러 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재를 참 잘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년간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여러 차례 의결 과정에서 대체로는 시간을 많이 소요해도 사회적 합의로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합의가 안 될 때 표결을 할 때 다수결의 표결이고,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대체로는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체로 가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저는 순조롭게 진행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그때 국가교육위원을 사임하기 전에 심화수학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했을 때 그때는 제가 표결 안 간 걸로 기억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합의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양쪽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인내심을 갖고서……

○**정성국 위원** 중재안을 내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정성국 위원** 장관님, 아까 업무 경감 그 부분을 시간에 쫓겨 가지고 말씀을 빨리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업무 경감은 우리 현장에서 너무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자료가 나오더라도 불필요한 업무가 많으면 수업을 할 수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래서 수업, 생활지도, 평가, 상담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부총리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업무 경감 혁신안을 아무리 내려 보낸다 해도 시·도교육청에서 실행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부총리님의 권고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방법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든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한다면 시·도교육청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때……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실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시·도교육청을 정말 칭찬하고 인정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천명하셔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과를 내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는 정성국 위원님이 국회 교육위에 계실 때 또 교육부가 위원님과 협력해서, 워낙 교총에서도 제안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총이 또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충하고도 협의하고 또 다른 교원 단체하고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교육청 변화가 좀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은 특히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는 역할에……

전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도록 해도 저는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의원실과도 협력해서 저희 교육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 거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받겠습니다.

오전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의평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11일 의대생 학부모와 교수 등이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과 오석환 교육부차관님 등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관련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오전에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교육부와 함께 의대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부가 전례 없는 조건 달아 공문 발송하고 차관님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노력하자는 취지가 이런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적인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분들의 말씀이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지켜볼 것이고요.

결국은 교육의 질 문제인데, 오전에 역시 장관님께서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그 브리핑 목적은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병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평원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 인증을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다만 학사 운영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이 평가 인증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병원의 주요변화계획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을호 위원 장관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원이라는 부분들이 압력으로 다가왔다 하면 그 부분은 압력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정을호 위원 독립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감독이 있더라도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권한을 넘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공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차관께서 브리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조금……

○정을호 위원 잠깐만……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목표는 의대생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의대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련의 조치나 유연화, 탄력화한다든가 또 의평원에 대한 그런 브리핑 같은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질 저하라는 부분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질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조금 더……

○교육부차관 오석환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의평원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재지정과 관련돼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했고요.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의평원이 수용을 해서 이행계획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지정 절차를 진행할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그 이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안 하고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니깐 그때 재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재지정과 관련돼 있는, 재지정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사전적으로 저희하고 심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이 앞으로 학교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변경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니 이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영호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후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호 죄송한데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분 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장애 학생이라든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이 사실은 너무 경쟁교육이라든지 각자도생이라든지 그러지 않고 토론도 하고 함께 연대하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협력체로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경쟁이 아니라 아까 ‘존엄을 다채롭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리고요.

혹시 장관님, AI 교실혁명 선도교사 관련인데요 스트렝스(strengths)5하고 버크만 검사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아마 스트렝스5가 강점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MBTI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검사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검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유료 검사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수집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처음부터 고려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PPT를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5월 20일 날 AI 디지털교과서 연수 대상자 1만여 명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만여 명의 교사가 이름, 학교, 핸드폰 번호가 유출되었어요. 그리고 교육부 공문에 보면 국장이 사과문이라고 하면서 ‘피해 등 접수’로만 나옵니다.

장관님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만천하에 유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경숙 위원 영혼 없는 사과 말고 정말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강경숙 위원 진심으로 용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부분이 자꾸자꾸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PPT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6월 18일 날 교실역량 선도교사 연수에서도 수강 사이트를 열어 놓고 오후 5시에 1만 2000명이 동시에 접속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알려 준 전화번호도 없고 서버가 다운될 게 뻔한데 동시 접속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해서 5단계 보시면…… 2단계도 보십시오. 5일간 165

역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4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만 200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의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효과성 검증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간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까 마무리를 다 못 해 가지고요, 시간 지키느라고.

장관님, 아까 학교용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일 아쉬웠던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계속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제한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을 미리 제대로 못 갖춰서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이 아마 협의를 계속하실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진선미 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동이 지금 한 오륙 년 사이에 몇만 세대가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다 입주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학교 인원, 아이들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평균 수치로 계속 학교를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입주가 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령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어디는 엄청 줄지만 그 지역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그 꼬마 초등학교 애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도 제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누구는 엄마가 다 데려다줘야 되고 멀리서 다녀야 되고 그러면 늘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는 고덕강일지구랑 두 지역이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래도 학교용지가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서울형 캠퍼스로 조금 보강이 될 수 있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둔촌은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아직 입주도 안 된 거거든요. 아시지만 거기가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입주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학령인구들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 정책은 다 평균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평균치를 몇백 퍼센트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가 옆 지역구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학교용지가 없이 공공용지로 경제 편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정말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 걱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아파트 안에서 차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장학금 관련해서 아까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가지고 대학을 갈 때 장학금을 지급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그리고 장관님이 특별히 그것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게 축소됐어요.

확인하시고 보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사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 특히 여야 위원님들도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교육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셨던 충고 또 우려 또 좋은 의견 반영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너무 좋은 제안과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서 AI 디지털교과서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오늘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거든요.

김민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안심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분 간사님이 소위원회 구성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빨리 출범하려면 정말 두 분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법안심사가 정말 또 늦춰지고 줄속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처음 열었으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는데 다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9일 금요일까지 간사님들이 소위 구성안을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인 첫 번째 현안질의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티키타카도 했지만 국가 교육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서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고요.

법안 질의 빨리 시작하자라는 위원장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아마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발언시간 7분 답변 시간 없이, 아마 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시도했다라는 역사에 남으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를 맡고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정이나 구성이나 또 국가교육위원회 관례 말씀하시는데 아마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까지 현안보고에 동의를 했습니다.

19일이라는 날짜를 박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배정하실지, 그렇다 보면 저희는 할 수 없이 파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복 간사님하고 제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로 했으면 일정에 대한 제안보다…… 19일이라고 하시면,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도 합의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다음 상임위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19일이라고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영호 제가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일주일 정도면 이 문제는 합의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19일이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그렇게 제가 이것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고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는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히 선 수, 재선 위원님부터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 7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느껴 본 소감은 참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다만 우리가 좀 적응이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상임위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오랜 시간 잘 참아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장관님과 국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분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직무대리 안상훈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지역인재정책관전담직무대리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중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이난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김민철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윤홍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권성연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류혜숙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주용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6월 18일 회부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이상 2건 6월 19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20.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1)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이상 3건 6월 2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6월 26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이상 6건 6월 27일 회부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이상 4건 6월 28일 회부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이상 2건 7월 1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이상 2건 7월 2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이상 2건 7월 3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7월 4일 회부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4.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이상 3건 7월 5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이상 2건 7월 8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7월 9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청원 회부**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2024. 6. 26. 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6월 27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6. 25.	34590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2024. 6. 27.	33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6. 28.	33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6. 27.	3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2024. 7. 1.	33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4. 7. 1.	33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4. 7. 3.	336